

월간

나라재정

FISCAL INFORMATION BULLETIN

06

2025 JUNE

VOL. 102

치열한 국제적 경쟁 속에 혁신, 투자, 도전
그리고 재정이 함께 하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



Theme Story

21세기는 그 어느 때보다 국가 간에 치열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기술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재정은 함께하고 있습니다.

발행처 한국재정정보원 주소 [04637] 서울특별시 중구 후암로 110, 서울시티타워
전화 02-6908-8200 팩스 02-2288-6200 홈페이지 www.fis.kr 발행인 윤석호 한국재정정보원장
문의 재정정보분석센터 | 02-6908-8652 기획·디자인·인쇄 (주)디자인어백플러스 | 02-2672-1535



재정 INSIGHT

04 통계로 보는 FIS 인사이트

산업혁신, 창업, 벤처 부문 예산

08 이달의 재정 VOCA

통합재정

10 재정칼럼

AI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재정의 역할

최재식 KAIST AI대학원 지정석좌교수

AI 시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지능정보사회 구현과 정부의 역할

이용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인공지능정책실 실장

재정 NOW

22 숫자로 보는 재정동향

2025년 4월 기준 재정동향

24 해외재정동향

주요국 및 국제기구 재정동향

34 재정 캘린더

재정 NAVIGATION

36 예술사 속 재정경제 이야기

그림으로 구현한 ‘미국인의 얼굴’

42 현실 속 재정제도 이야기

자연독점에 대한 시각:

규모의 경제 vs. 거래비용

48 재정이 MONEY

해상풍력 프로젝트 금융조달 환경과

녹색금융의 필요성

52 플랫폼이 된 도시

베를린, 역사의 수도에서 유럽에서

가장 활발하고 스마트한 도시가 되기까지

60 서울 남산공원의 여섯 위인

62 이달의 재정경제 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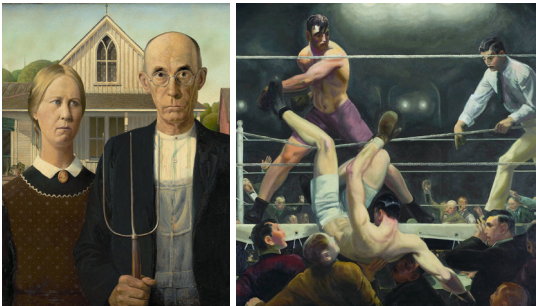
FIS 재정

64 FIS 재정 알리미

dBrain+ 국제협력

66 재정원 소식

68 애독자 코너



통계로 보는

산업혁신, 창업, 벤처 부문 예산

글·우수연 재정정보분석센터 연구원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우리나라는 현재 중소기업의 경쟁력 약화, 기술 격차 심화, 벤처 생태계 위축 등 복합적인 난제에 직면해 있다. 특히 기술창업 감소, 기업가 정신 약화, 투자 시장의 불균형 심화는 벤처 생태계의 자생력과 성장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도전 과제들을 극복하고 국가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의 혁신과 투자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AI·디지털·기후테크 등 미래 전략 기술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이와 연계된 산업 혁신, 창업, 벤처 생태계의 활성화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 과제가 되었다. 세계적으로 신산업에 대한 경쟁은 치열하나,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관련 기술 도입 및 활용은 미흡한 단계이다. 또한, 2025년부터 총인구 감소로 초고령 사회로 전환되어, 중소기업의 인력난에 따른 경영환경 변화를 직면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2025년 예산을 편성하여,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과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2025년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28.2조 원으로 전년 대비 0.7% 증가한 수준이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총 7개 부문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산업혁신 부문이 5,053억 원(8.0%) 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정부는 2025년 예산안 4대 투자중점¹⁾ 중 하나로 '경제혁신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여, 중소기업 성장 사다리를 구축하고, R&D 혁신, 첨단산업·유망 서비스업 육성을 통해 혁신생태계를 조성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부문별 지출 추이 |

(단위: 억 원, %)

구 분	2021년 결산	2022년 결산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
산업·중소기업·에너지	461,619	736,504	265,022	279,937	281,772
산업혁신지원	55,218 (12.0)	57,827 (7.9)	59,381 (22.4)	63,146 (22.6)	68,172 (24.2)
창업 및 벤처	50,558 (11.0)	42,348 (5.7)	40,851 (15.4)	39,225 (14.0)	39,505 (14.0)

주: 괄호 내 수치는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에서 각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

자료: 한국재정정보원, 「2025 주요 재정 통계」

1) 경제 혁신 생태계 조성, 약자복지, 미래 대비 체질 개선, 튼튼한 안보·안전한 사회

2025년 분야 내 비중이 가장 많이 증가한 산업혁신지원 부문은 전년 대비 55,053억(1.6%p) 증가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확보를 위해 자동차, 로봇, 조선 등 기존 주력산업과 함께 첨단 전략산업 전반에 대한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고, 미래 인재양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국가 제조업 생태계 강화 및 첨단산업의 부가가치 창출 확대를 위한 초격차 기술 확보 등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한다. MIT, 프라운호퍼 등 세계적 연구기관과의 글로벌 협력 공동연구를 확대하고, 첨단전략산업 특성화 대학원, 에너지융합대학원 등 산업 분야별 석·박사 혁신인재양성 지원을 강화한다.

| 산업혁신지원 부문 주요 프로그램 추이 |

(단위: 조 원, %)

구 분	2021년 결산	2022년 결산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	15,565 (3.9)	14,125 (2.1)	15,093 (7.6)	17,390 (8.2)	18,228 (8.4)
산업경쟁력기반구축	8,526 (2.2)	10,303 (1.5)	11,256 (5.7)	9,724 (4.6)	11,574 (5.3)
주력산업진흥	7,025 (1.8)	9,022 (1.3)	10,818 (5.5)	9,949 (4.7)	11,534 (5.3)
지역경제활성화	11,563 (2.9)	10,990 (1.6)	9,559 (4.8)	8,978 (4.2)	8,096 (3.7)
신산업진흥	3,935 (1.0)	4,834 (0.7)	4,803 (2.4)	4,870 (2.3)	4,900 (2.2)

주: 괄호 안은 분야 대비 각 프로그램 예산 비중

자료: 한국재정정보원, 「2025 주요 재정 통계」



창업 및 벤처 부문에서는 세계로 도약하는 K-글로벌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을 강화한다. 대·중견기업, 공공기관 연계 민·관 협력 오픈 이노베이션 지원을 확대하고, 투자 유치 등 시장에서 유망성을 검증받은 딥테크 스타트업들과 대기업들을 매칭하는 밸류업 프로그램(70억 원)을 신설한다. 이와 함께 차세대 성장 동력인 AI, 반도체 분야에서 글로벌 유니콘을 육성하는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의 지원을 확대해 AI 및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는 맞춤형 특화 지원 프로그램 별도 신설 및 국내외 대기업과 협업하는 프로그램을 새롭게 추진한다.

창업 및 벤처 부문 주요 프로그램 추이 (단위: 조 원, %)

프로그램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창업환경조성	37,581 (9.5)	36,303 (5.4)	37,188 (18.8)	34,361 (16.3)	34,051 (15.6)
벤처기업활성화지원	12,977 (3.3)	5,763 (0.9)	3,411 (1.7)	4,645 (2.2)	5,333 (2.4)
저탄소생태계조성	- (-)	282 (0.3)	252 (1.1)	218 (1.6)	122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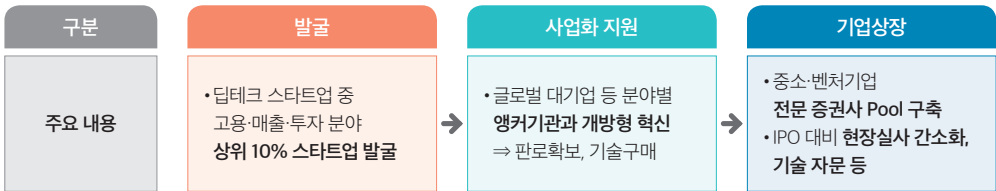
주: 괄호 안은 분야 대비 각 프로그램 예산 비중
자료: 한국재정정보원, 「2025 주요 재정 통계」

산업혁신과 창업, 벤처 부문과 관련된 주요 소관으로는 중소벤처기업부, 산업자원통상부가 있다. 각 부처의 2025년 업무 추진 계획에서도 신산업 혁신기업을 육성하고 디지털 전환 등으로 확장하기 위한 정책 방향이 제시되어 있다.

산업혁신지원 부문의 주요 소관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산업 선도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으로 레벨업 전략을 지원한다. 10대 초격차 분야²⁾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딥테크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사업화, 상장까지 레벨업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은 2025년 70억 원 규모로 신설되었으며, 대기업이 밸류업 프로그램과 함께 투자까지 집행할 경우 모태펀드에서 1:1 매칭 투자를 지원하는 100억 원 규모의 ‘밸류업 펀드’도 2025년 신설하였다.

2) 스텝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 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로봇, 빅데이터·AI, 사이버보안·네트워크, 우주항공·해양, 차세대 원전, 양자

딥테크 스타트업 레벨업 전략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한편, 중소기업에 AX·DX 등³⁾ 신기술 도입을 통해 제조 혁신 가속화를 추진한다. 제조 중소기업의 공정 자동화, 지능화, 자율화 등 현장 맞춤형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추진하고, 중소기업 AI 활용·확산 방안 및 스마트제조 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관련 법을 제정한다.

DX 기반 제조혁신 지원 내용

구분	자동화	지능화	자율화
주요 내용	공정자동화 및 제조로봇 도입 지원	제조데이터 기반 고도화 스마트공장	제조AI·디지털트윈이 적용된 자율형공장
2025년 목표	675개(330억 원)	1,000개(1,750억 원)	40개(120억 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창업 및 벤처 부문 주요 소관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주력산업의 위기 극복과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AI·첨단로봇·바이오 등 유망산업 플랫폼 경쟁에 대비하고, 소재·부품·장비 등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급속히 확보해야 함을 강조했다. 산업 R&D의 경우 상반기 중 신규 과제의 85%를 선정하고, 미래기술 선점을 위한 ‘알키미스트 프로젝트(Alchemist Project)’에 본격 착수한다. 이는 정부가 경제 파급효과가 크고 시장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실패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얻는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중견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를 찾아 개선하고, 성장지향형 지원체계를 담을 수 있도록 「중견기업법」도 개정할 예정이다.

3) 인공지능 전환(AI Transformation, AX)과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DX)



이달의 재정 VOCA

통합재정

통합재정이란 국제기준에 따라 정부의 모든 회계와 기금을 포괄하는 재정 개념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정부의 회계·기금 간, 정부 간 내부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 활동을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통합재정의 이해

통합재정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 통장으로 예를 들어봅시다. 여러분은 수입과 지출을 잘 관리

하기 위해서 여러 통장을 돌 텐데요. 월급으로 일반적인 지출을 하는 생활비 통장, 여행 준비 통장, 결혼 자금 통장 등 목적을 두고 관리합니다.

여러 통장에 나눠 관리할 때, 모든 거래 내역을 합산하면 월급보다 더 많은 수입과 지출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장끼리 이동되는 금액을 제외해서 순수한 수입과 지출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 전체의 수입과 지출을 파악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모든 가족의 수입과 지출을 더 하고, 가족 간 이체가 있으면 그것을 빼면 되겠지요. 이렇게 내부거래를 제거해 순수한 재정 활동을 파악합니다. 요약하면 첫째, 내 통장 간 거래를 파악해 이중 계산을 제외합니다. 둘째, 구성원 간 거래를 파악해서 내부거래를 제거합니다.

개념을 재정으로 확장하면 각 통장을 회계·

1986년 GFSM과 2001년 GFSM 일반정부 포괄 범위(2023년 기준)

	1986 GFSM	2001 GFSM	
회계	일반회계 1개 기타특별회계 16개 기업특별회계 5개	좌동	중앙
기금	사업성 기금 등 59개	금융성·외평기금 9개	
비영리 공공기관	제외	231개 기관	
회계	일반회계 243개 기타특별회계 1,706개 지방교육비특별회계 17개 직영공기업특별회계 252개	좌동	지방
기금	지방재정법 대상 2,814개 전체	좌동	
비영리 공공기관	제외	118개 공사·공단	

주: 금융성 기금(8개): 기술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무역보험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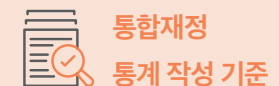
※ 자료: 기획재정부, 「2023회계연도 한국통합재정수지」, 2025.

기금이라 부르고, 구성원을 중앙재정, 지방재정, 공공기관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통합재정의 범위는 중앙정부, 일반정부(중앙+지방+비영리 공공기관), 공공부문(일반정부+비금융 공기업)으로 구분합니다.¹⁾

통합재정
통계의 활용

국가 전체의 분야별 재정지출 규모와 수지를 파악해 국가 재정 전체의 배분을 알 수 있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에 활용해 재정정책 수립에 기여합니다. 동일한 기준에 의한 재정수지의 산출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간 비교도 가능해져, 지방정부의 건전한 재정운용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통합재정 통계는 IMF의 정부재정통계편람

(A Manual on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GFSM)에 따라 국제 공통 기준으로 산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가 비교 시 일반정부 통합 재정 기준으로 작성된 통계를 활용합니다.

통합재정
통계 작성 기준

통합재정 통계를 작성하는 기준(GFSM)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포괄범위와 작성 기준을 바꾸고 있는데요. 1974년 처음 제정된 이후 1986년, 2001년, 2014년 등 총 3차례 개정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986년 기준과 2001년 기준으로 통합재정 통계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1) 포괄범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나라재정 2025년 4월호 p.44-45를 참고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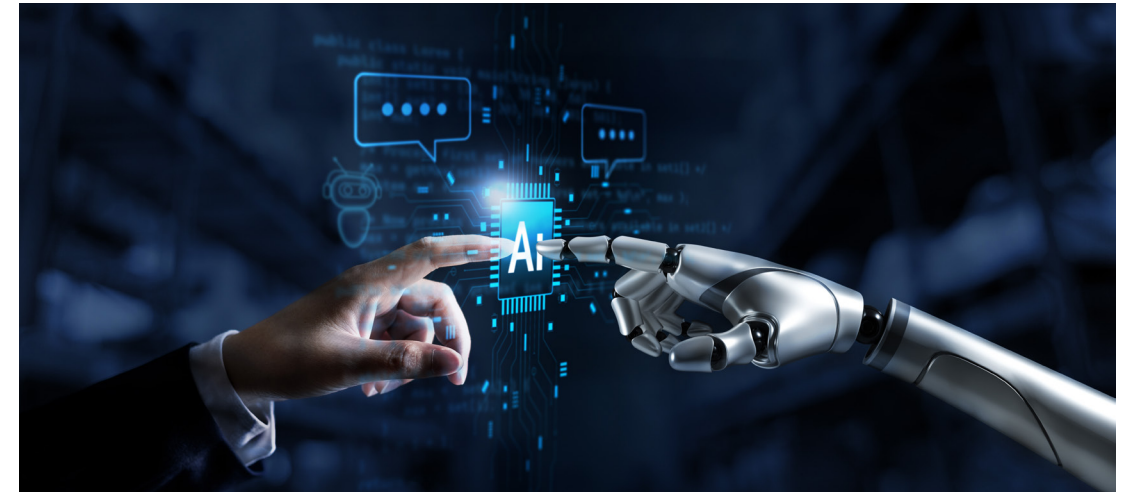


AI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재정의 역할

최재식 KAIST AI대학원 지정석좌교수

AI는 산업과 데이터 과학의 근간을 흐드는 기술로 인프라, 데이터 분야 인재 육성 필요
미, 중, EU, 싱가포르 등은 재정 정책 활용, AI 개발 인프라 확충 및 일자리 육성 지원
한국, 고성능 AI 모델에 필요한 자원 부족하나 AI 인재 양성을 위한 연구 지원 노력 중
AI 미래 인재 양성은 통합 재정 지원과 장기 계획적인 투자, AI 재교육 등이 필요

- 미국, 연구 개발 프로그램 자금 지원 확대, 고품질 인력 교육 프로그램으로 인재 양성
- 중국, 재외 AI 인재 유치 위한 지원과 대규모 산학 AI 연구 센터 확장
-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일본 등 AI 스타트업 지원, 인재 육성 등의 정책 지원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하여 전 세계적인 산업 및 경제 패러다임이 근본적인 변화를 촉발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 경쟁력 확보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2035년까지 AI로 인한 경제성장의 효과가 전 세계적으로 15%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에 AI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를 공급하는 미국 경제는 26%가 성장하고, AI에서도 닫힌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 중국은 14.5%가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글로벌 AI 서비스를 하지 못하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가들은 10% 이내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생성형 AI 및 대형언어모델(Large Language Model)과 같은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영향을 받고 있다. 이는 산업을 재편하고, 경제 패러다임을 재정의하며, 국가별 경쟁을 심화시키고 있다. 특히 인간의 추론 능력, 학습 능력, 계획 수립 능력을 모방한 초기 형태의 일반인공지능(AG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의 경우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처음 접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스스로 학습하고 해결책을 찾아내는 능력을 갖추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초기 형태의 AGI가 등장하는 경우 과학 및 기술이 폭발적으로 발전하고 노동이 자동화되면서 '노동'의 개념이 변화하고, AGI의 목표와 인류의 목표가 어긋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사회적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AI의 발전은 파괴적인 미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이런 미래 변화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AI의 발전에 필요한 인프라, 데이터 및 인재를 잘 육성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AI 컴퓨팅 자원 및 학습 데이터의 부족, 중소기업의 낮은 AI 도입률, 그리고 AI 인재 유출 및 해외 인재 유치 전략의 미흡함 등 여러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다. 또한, AI 인재교육 프로그램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실제 참여 유인 부족과 디지털 격차 심화 가능성이라는 질적 문제가 제기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파편화된 정책 접근 방식을 넘어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고, 민간 부문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며, AI가 가져올 일자리 변화에 대한 질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AI 인재 양성 및 활용을 위한 지속 가능하고 포괄적인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AI 기술이 국가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사회 전반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본 고에서는 한국이 AI 선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필수적인 재정지원 방안을 AI 학습 인프라 접근성 강화, AI 인재를 위한 충분한 일자리 창출, 그리고 타 직군 인력의 AI 재교육 용이성 제고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조망하려고 한다.



1. AI 학습 인프라 접근성 강화를 위한 재정의 역할

주요국의 AI 개발을 위한 투자 방향

미국, 중국, 유럽연합, 싱가포르의 인재들이 AI 개발에 필요한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양한 재정 정책을 활용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CHIPS for America Act와 같은 법안을 통해 반도체 제조 시설에 상당한 재정 지원(예: 520억 달러, 약 69조 원)을 약속했다. 이는 AI 발전을 위해 중요한 반도체를 자국에서 생산하겠다는 계획의 일환이다. 민간기업인 인텔 또한 STEM 교육 및 반도체 연구 프로그램에 5천만 달러를 투자하는 등 상당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국립과학재단(NSF)은 근본적인 AI 연구, 교육 및 인력 개발 그리고 고급 컴퓨팅 인프라 접근을 위해 약 9,730억 원 규모의 상당한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스탠퍼드 대학은 최근 연구보고서에서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의 성공이 주로 인재 구조에서 비롯되었으며, 대다수의 연구원이 국내에서 훈련받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는 경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인재 유지 전략 강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중국은 80개 이상의 대규모 언어 모델(LLM)을 공식 승인하며 LLM 분야에서 미국과의 기술 격차를 빠르게 줄이고 있다. 이는 주요 AI 강국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여 항저우를 중심으로 구축된 대규모 클라우드 서비스를 중국 전역을 넘어서 아시아 시장으로 확장하려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글로벌 AI 인재와 개발자를 자국 생태계로 유치하기 위해 오픈소스 생태계를 전략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기술 자립을 강조하며 민간 기업에 대한 상당한 자금 지원을 약속했다. 바이트댄스와 텐센트와 같은 주요 기술 대기업들은 AI 개발에 각각 1,500억 위안과 730억 위안 이상의 막대한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AI 스타트업이 대기업에 독점하는 컴퓨팅 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컴퓨팅 바우처’와 같은 혁신적인 정책을 시행했다.

유럽연합(EU)은 AI 개발을 위해 2천억 유로(약 300조 원) 규모의 민간 및 공공 자본 동원 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기존 EU 기금을 활용한 ‘인베스트AI 펀드’에서 500억 유로, 민간 투자에서 1,500억 유로가 포함된다. EU는 일관되고 안전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동시에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줄여 유리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국가 AI 전략 2.0(NAIS 2.0)을 업데이트하여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선도적인 AI 혁신 허브가 되겠다는 목표를 명확히 했다. 이 전략은 생성형 AI에 중점을 두며 혁신과 강력한 규제의 균형을 추구한다. 정부는 AI 관련 예산을 크게 늘려 투자를 유치하고 AI 스타트업 및 기업을 위한 기술 인프라 및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다. 이런 노력으로 싱가포르는 다국적기업과 인재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한국의 AI 개발을 위한 투자 방향

국내에서는 AI 컴퓨팅 인프라 확보 및 지원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성능 AI 모델, 특히 대규모 모델 개발에 필요한 자원이 여전히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예를 들어, 광주 AI 데이터센터는 880장의 H100 GPU 중 416장을 정부가 확보하여 국내 산학연 AI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는 국가적 수요에 비하면 아직 제한적이다. 더불어, GPU 확보에만 지나치게 집중할 경우 엔비디아와 같은 특정 공급업체 생태계에 대한 과도한 의존으로 이어져 효율적인 투자가 이뤄지기 어려울 수도 있다.

AI 컴퓨팅 자원 및 데이터 인프라의 부족에 대한 인식으로 다양한 재정지원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지만, 여러 부처와 기관의 과도한 경쟁으로 파편화된 정책이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민간 클라우드 시장에서 고용량 고성능의 외산 클라우드가 8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서, 민간 기업들이 대규모 양질의 클라우드 인프라에 투자하는 여력이 많이 약해져 있다. 이런 상황은 비효율성, 중복, 그리고 프로그램 간 시너지 부족을 초래하여 재정 지원의 전반적인 영향을 약화시킬 수 있다. AI 인프라 투자에서는 파편화되고 경쟁적인 투자를 지양하고 통합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에 입각한 합리적인 투자를 통해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이 시장 과점 상황의 우려에도 미군의 소프트웨어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회사인 팔란티어를 육성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게 한 것을 참고하여, 공공 클라우드 인프라 시장을 확대하면서 국산 클라우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다.

2. AI 인재의 일자리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주요국의 AI 일자리 육성 사례

미국은 최고 수준의 글로벌 인재를 유치하고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며, 연방 연구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고품질 인력 교육 프로그램의 가용성을 늘려 산업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미국 민간기업이 AI 학습과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법적인 제약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으면서 글로벌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AI 규제를 조정하고 있다. 창업 후 다양한 방법으로 회수할 수 있는 전략과 생태계를 제공하고 있어 시장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투자하고 창업하고 실패하고 성공하는 과정을 통해 역량 있는 AI 인재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국은 2030년까지 AI 인재풀을 100만 명에서 600만 명으로 확대하려는 야심 찬 목표를 가지고 있다. 중국은 해외 AI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매우 경쟁력 있는 급여와 포괄적인 연구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미국과 유럽에서 활동 중인 중국 연구자들의 귀국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상당한 자금과 새로운 연구실 설립 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협력적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대규모 산학 AI 연구 센터를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가 AI 인재 개발을 국가적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싱가포르의 향후 5년 이내에 AI 전문가를 세 배인 15,000명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작은 국토 면적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는 AI 지수에서 세계 3위를 기록하는 등 인재 개발 및 산업 성장에서 놀라운 발전을 보여주었다. 국가 AI 전략 2.0(NAIS 2.0)은 AI 스타트업 및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를 명시하고 있다. 호주는 2030년까지 161,000명의 AI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캐나다는 세계적 수준의 AI 연구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일본은 미래 인재 파이프라인 확보를 위해 젊은 AI 연구자 육성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의 AI 일자리 육성 방향

한국은 AI 스타트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다양한 산업 분야에 AI 도입을 장려하며, 일자리 창출 및 인재 유지를 위한 다양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다양한 새로운 분야에 대한 연구를 지원하여 새로운 시장을 만들려는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정부의 정책이 AI 분야에 투자하여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있지만, AI 시장 참여자 특히 AI 인재가 원하는 일자리는 기존보다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고숙련, 고임금 일자리다. 이는 재정 지원이 AI 개발 및 도입을 촉진하는 것을 넘어, 기존 인력이 새로운 고부가가치 AI 관련 직무로 전환하는 것을 촉진하거나, AI와 함께 지속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전략적으로 사용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AI를 위한 투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나 그런 인재와 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관에 전략적으로 투자되는 것이 필요하다.



3. 기존 인재의 AI 재교육을 위한 재정지원

주요국의 인재에 대한 AI 재교육 정책

미국 정책은 AI의 영향으로 직업을 바꿔야 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고등 교육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을 강조한다. 이는 훈련 및 재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 확대, 직업 기반 훈련, 평생 교육, 견습 프로그램의 증대를 요구하는 것이다. 더욱이, 미국은 AI 기반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상실에 대비하여 실업 보험 강화와 같은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접근 방식을 포함한다.

OECD 보고서는 AI가 교육 형평성 및 포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AI가 맞춤형 학습 경험과 풍부하고 몰입적인 콘텐츠(예: 게임 기반 학습, VR/AR 시뮬레이션)를 제공하며, 다양한 평가 방법을 지원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보고서는 AI 편향성, 데이터 프라이버시 문제, 그리고 신중하게 관리되지 않을 경우 기존 불평등을 강화할 위험과 같은 잠재적 과제에 대한 중요한 경고도 제시한다. 이는 AI의 이점을 활용하면서도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균형 잡힌 규제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한국의 인재에 대한 AI 재교육 정책

한국은 교육부의 '직장인 인공지능 디지털 역량강화', 고용노동부의 'K-디지털 트레이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AI 직무전환 희망자 맞춤형 교육 지원사업'을 통해서 다양한 방식의 AI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AI를 만들고 활용하는 일자리가 다른 일자리에 비해서 더 많이 필요하게 되고 있다. 인프라에 대한 투자와 다르게, 교육은 다양한 부처에서 다양한 수요에 따라서 재교육을 원하는 인원들이 언제든지 편하게 온라인,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AI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AI의 학습 생태계를 유지하고 강화하는데 중요하다.

4. 결론

한국의 AI 미래 인재 양성은 단순한 교육 프로그램의 확대를 넘어선 통합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AI 인프라, 일자리 창출 그리고 재교육이라는 세 가지 핵심 영역에서 현재의 재정 지원 노력에도 불구하고 좀 더 개선된 정책 지원이 필요한 것이다.

첫째, AI 학습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파편화되고 비효율적인 투자는 성과의 비효율성을 유발하니, 통합적이고 장기 계획적인 투자를 통해서 인프라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공 클라우드 시장을 키워서 국내 기업들이 역량을 키워서 민간 클라우드 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우도록 육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AI 시대 일자리는 한시적이고 양적인 일자리 증가가 아니라, 지속 가능하고 질적인 전환이 요구된다. 기존 인력이 AI를 통해서 고부가가치 직무로 원활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돕고, 기업이 글로벌 서비스 경쟁력을 갖춰서 AI 관련된 일자리의 질이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타 직군 인력의 AI 재교육은 디지털 전환 시대의 핵심 과제다. 이 경우 다양한 부처와 지역에서 충분한 AI 교육의 기회를 국내외 인력들에게 제공하여, AI를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는 토대가 육성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AI 시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지능정보사회 구현과 정부의 역할

이용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인공지능정책실 실장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촉발하는 AI 기술에 각국은 막대한 투자 중
AI의 급속한 발전은 정보의 신뢰성 문제, 사회 분열 등 여러 문제도 야기
특히 윤리적 쟁점이 끼칠 사회적 영향에 대비하여 법적·윤리적 프레임 워크 필요
정부는 AI 생태계를 조성하고 재정 지원과 제도 마련으로 성장 뒷받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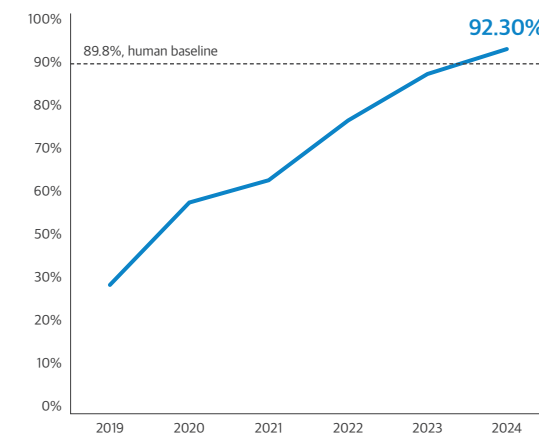
- 사용자 90% 도달률은 인터넷이 33년, ChatGPT가 3년으로, 빠른 속도로 AI 확산
- 2024년 인터넷 트래픽의 51%가 AI봇에 의해 발생해, AI 생성 콘텐츠 증가
- 동시에 AI 윤리, 개인정보보호, 알고리즘 투명성 등 명확한 가이드 라인 제시 필요



1. AI 시대의 도래와 새로운 패러다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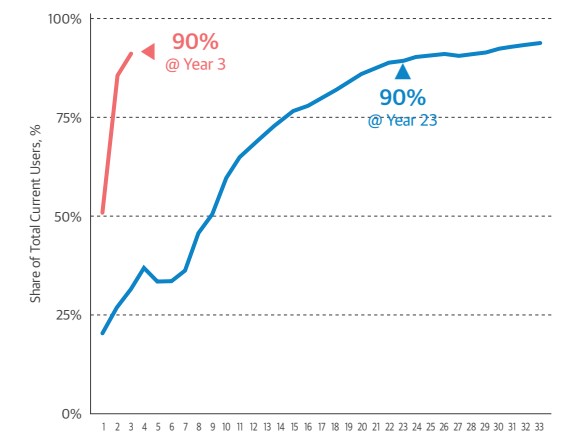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AI는 이미 우리의 일상 깊숙이 자리 잡아 온라인 민원 상담, 지식 검색, 의료 영상 판독, 업무 자동화, SW 개발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생성형 AI는 기존 AI의 한계를 넘어 인간과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해지고, 특정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하였다. Stanford HAI에 따르면 인간 수준의 언어 이해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설계된 MMLU(Massive Multitask Language Understanding) 벤치마크에서 2024년 기준으로 AI는 92.30%의 정확도를 기록해 사람의 평균 기준선인 89.8%를 넘어설 정도로 발전하고 있다. Bond Capital 분석 결과 인터넷은 글로벌 사용자의 90%에 도달하는 데 33년(1990년~2022년)이 걸렸다면 ChatGPT는 3년(2023년~2025년)만에 90%에 도달하였다. AI는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글로벌 확산을 이룬 기술 중 하나다.

MMLU: average accuracy
Source: Papers With Code, 2025 | Chart: 2025 AI Index report



출처: Stanford HAI(2025)

Internet vs. ChatGPT Users - Percent Outside North America
(1990-2025), Per ITU & Sensor Tower



출처: Bond Capital(2025)

AI 기술의 발전은 경제·사회·문화 다방면에 근본적인 변화를 촉발하고 있다. AI는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이미 많은 국가들은 AI 기술 역량 확보를 국가의 핵심 전략으로 설정하고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글로벌 경쟁 환경 속에서 AI 인프라 구축에 전방위적 노력을 하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주요국들의 AI 정책은 규제 완화와 민간 주도 혁신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으며, AI 주도권 확보를 위해 대규모 투자 경쟁을 펼치고 있다. 미국은 AI 규제를 완화하고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초기 1,000억 달러(약 144조 원)를 투자하고 향후 4년 동안 최대 5,000억 달러(약 720조 원)를 투자할 계획이다. 중국은 AI 기술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기업의 R&D 투자 부담을 완화하고 해외 고급 인재에게 영주권을 제공하는 등 정부-기업-인재 간 협력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연합(EU)도 생성형 AI 모델 개발이 가능한 AI 컴퓨팅 인프라를 최소 4곳 이상 구축하는 'AI 기가 팩토리'를 중심으로 2,000억 유로(약 300조 원) 규모의 'Invest AI Initiative'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AI 경쟁 환경에서 우리나라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우리나라는 이미 지능정보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지능정보화기본법』에서 ‘지능정보화’는 정보의 생산·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 기술이나 다른 기술을 융합해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효율화하거나 고도화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지능정보사회’는 이러한 지능정보화를 통해 산업·경제, 사회·문화,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발전을 이끌어가는 사회를 말한다. 이는 단순한 기술 발전을 넘어 사회 전반의 구조적 변화를 포괄하는 의미를 지닌다. 산업, 경제, 사회, 문화, 행정 등 전 영역에서 데이터 기반의 지능정보기술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미래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특히 제조업, 서비스업, 농업 등 전통 산업뿐만 아니라 신산업인 바이오, 반도체, 양자기술 등에서도 지능정보기술의 하나인 AI가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다. 결국, 지능정보사회로의 성공적인 전환은 국가의 경쟁력과 직결되며, 중장기적 국가 비전 수립과 정부의 전략적 재정 투자, 제도 정비, 민관 협력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2. 지능정보사회의 구현과 정부 재정의 역할

지능정보사회로의 전환과 산업 구조 혁신

지능정보사회가 도래하면서 핵심적인 변화 중 하나는 산업 구조의 혁신일 것이다. 제조업과 서비스업뿐만 아니라 농축수산업 등 전통적 산업 영역까지 AI와 디지털 기술의 도입이 가속화되면서 기존 산업 간 경계를 허물고 생산성 향상, 효율성 제고, 새로운 가치 창출이 가능할 것이다. 제조업에서는 AI 기반 스마트공장이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의료 분야에서는 AI를 통한 신약 개발과 진단 정확도 향상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2024년 노벨화학상을 공동 수상한 구글 딥마인드의 데미스 허샤비스와 존 점퍼는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는 알파폴드를 개발하여 생명과학·의학 분야에 혁명적인 기여를 했고 이후에도, 단백질이 DNA나 다른 분자들과 상호작용하는 구조까지 예측할 수 있는 알파폴드3를 비상업적 연구 목적으로 공개하여 신약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하고 있다.

AI는 경제적 효과를 넘어 사회 전반에 걸쳐 문화적·구조적·관계적 변화를 촉발하고 있다. AI 일상화 시대는 누구나 손쉽게 AI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일상생활뿐 아니라 일하는 방식, 사회 전반에 AI가 깊숙이 침투하는 시대를 의미한다. 생성형 AI 기술이 업무의 일부를 보조적으로 수행하여 인간과 인간의 직접적 상호작용이 줄고, 인간과 AI의 새로운 협업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AI 챗봇이나 에이전트가 반복적인 업무를 대신하면서, 인간은 보다 창의적이고 고부가가치 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AI의 발전은 우리가 정보를 접하고 소통하는 방식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이제는 많은 이용자들이 인터넷 검색포털 대신 ChatGPT, 클로드, 제미니 등에서 검색하고 있다. 콘텐츠 생산과 유통이 자동화 되고 활용되면서 개인이 정보를 받아들이는 방식도 달라지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임퍼바(imperva)는 2024년 인터넷 트래픽 중 51%가 AI 봇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분석했을 정도로 AI 생성 콘텐츠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진위 구별이 어려워지고 있다. 딥페이크 기술의 발달로 시각·청각 정보의 신뢰성이 낮아지고 있으며, AI 기반 추천 알고리즘은 정보 편향 현상을 초래하여 사회적 분열과 갈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지능정보사회의 윤리적 쟁점과 대응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공정성, 투명성, 프라이버시, 자율성, 책임성 등 다양한 윤리적 쟁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AI 학습 데이터에 내재된 편향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차별을 재생산할 위험을 가지고 있으며, AI 모델의 불투명성은 설명 가능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 또한, AI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대규모 개인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은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를 증대시키고 있으며,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이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는 경우에 대한 대비도 요구된다. 특히, AI가 초래한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과 지위에 관한 문제는 아직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아 새로운 법적·윤리적 프레임 워크 마련이 시급하다.

결국, 이러한 사회적 영향과 윤리적 도전은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인간과 기술의 관계, 사회적 가치와 규범의 재구성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 사회에 던지고 있다. 따라서 기술 발전과 함께 윤리적 성찰이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책임 있는 AI’ 발전을 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의 역할과 재정 투자

정부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주도하는 기존 방식으로는 급변하는 AI와 같은 지능정보기술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 기술 발전 속도가 빨라지고 시장 환경이 복잡해지면서, 정부가 모든 기술 변화를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따라서 민간의 역동성과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정부는 생태계 조성자로서 그 기능을 강화해 기업들이 경쟁력을 키우고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 물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조정하고 합의를 이끌어 내는 중재자의 역할도 중요하다.

결국 정부는 R&D 지원, 인프라 구축, 규제 개선 등 기반을 만드는 데 전력하고, 민간은 지능정보 서비스 개발과 사업화, 투자 유치 등을 중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시 말하면 정부와 민간이 각자의 강점을 살린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꼭 필요한 곳에 확실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현명한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예로 정부는 민간이 직접 투자하기 어려운 대규모 AI 컴퓨팅 인프라나 학습 데이터 구축, 세계 수준의 혁신적 AI 모델 개발 지원, 차세대 AI R&D, 인재 양성 등에 집중 투자할 필요가 있다. 대규모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은 GPU 이용 비용 절감과 접근성 향상을 가져올 것이다. 예를 들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한 대규모 데이터센터와 국산 AI NPU를 탑재한 고성능 서버, 초고속 네트워크 인프라가 구축되면, AI 서비스 개발과 운영에 드는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다. 그 결과 연구자들과 기업들이 AI 기술과 서비스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문턱이 낮아질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민간에서 개발한 다양한 AI 서비스를 공공부문에 먼저 도입하고, 성공 사례를 적극 확산 시켜야 한다. 정부가 공공부문에 AI를 적극 도입하면 국민들은 공공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국민 삶의 질이 향상되고, AI에 대한 신뢰와 수용성은 물론 국민들의 AI 활용 역량도 높아질 것이다.

정부는 재정 지원을 넘어 관련 법·제도의 마련과 규범 정립 등 종합적인 지원도 병행해야 한다. 특히 AI 기본법의 2026년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신뢰받는 지능정보사회 구축에 힘써야 한다. 정부는 AI 윤리, 개인정보보호, 알고리즘 투명성 등에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규제 샌드박스 등 혁신적 실험 공간을 확대해 신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해야 한다.

AI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시스템 구축, 청년·연구자 지원 확대, 기존 산업 근로자 재교육 등 인적자본 투자도 정부의 중장기적인 역할이다. 동시에 AI로 인한 일자리 변화와 사회적 불평등에 대응해 일자리 안전망과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 중심의 지능정보사회 실현을 위해 디지털 포용 정책과 전 국민의 AI 활용 격차가 생기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도 시급하다. 이런 노력을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나라가 AI 및 디지털 기술 분야에서 세계적 선도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져야 한다.

3. 지능정보사회 준비와 전략적 접근

AI 기술은 단순한 도구를 넘어 우리 사회 전반을 재편하는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 변화의 속도와 범위는 과거 어떤 기술혁신보다 빠르고 깊다. 우리는 지금, 지능정보기술을 통해 새로운 사회적 질서를 만들어가는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무엇보다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정부는 시장이 감당하기 어려운 대규모 인프라 투자와 제도 기반 마련에 집중하되, 민간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플랫폼형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민간은 기술 개발과 산업 혁신의 전면에 나서고,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토대를 책임져야 한다.

동시에, 누구나 AI를 활용할 수 있는 포용적 디지털 환경이 필수적이다. 데이터, 교육, 인프라, 윤리 기준 등은 국민 모두가 접근할 수 있도록 기능해야 하며, AI 활용 역량의 격차가 사회적 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AI가 사회 곳곳에 자리 잡으면서, 기술의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는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따라서 ‘책임 있는 AI’ 확산을 위한 윤리와 법제 정비도 선택이 아닌 필수다. 기술에 대한 사회적 신뢰는 공정성과 설명 가능성에서 출발하며, 이는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 국제 표준을 선도하려는 전략적 외교, AI 윤리와 거버넌스에 대한 글로벌 논의 참여, 국경을 초월한 인재·기술 협력 등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

결국 우리가 지향해야 할 지능정보사회는 단순히 ‘더 똑똑한 사회’가 아니다. 더 신뢰받고, 더 공정하며, 더 지속 가능한 사회, 바로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기술이 사회 전체의 성장과 연대를 이끌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 그리고 국민 모두가 함께 준비하고 참여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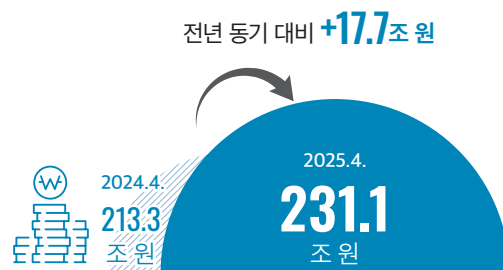
지금 바로, 그 출발점이다.

재정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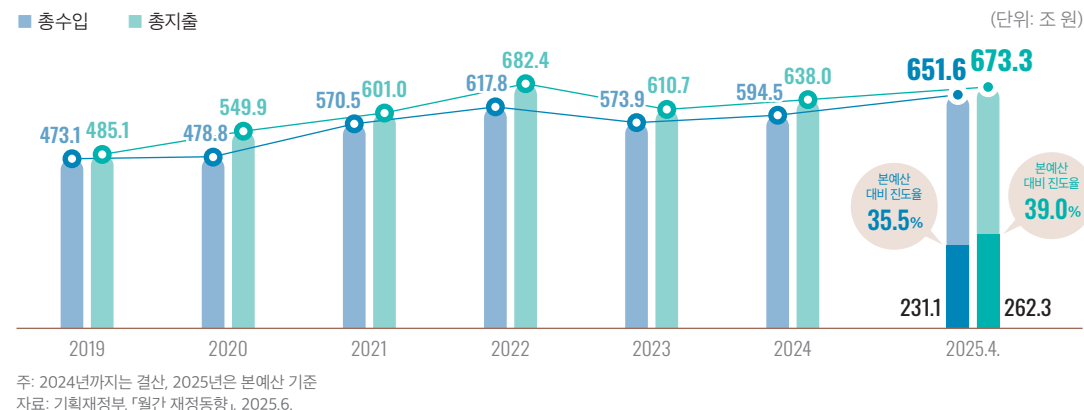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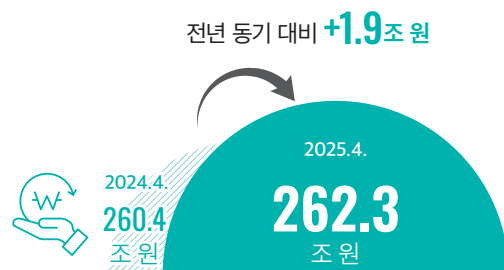
2025년 4월 기준

총수입·총지출

총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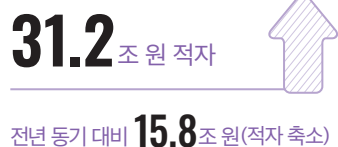


총지출



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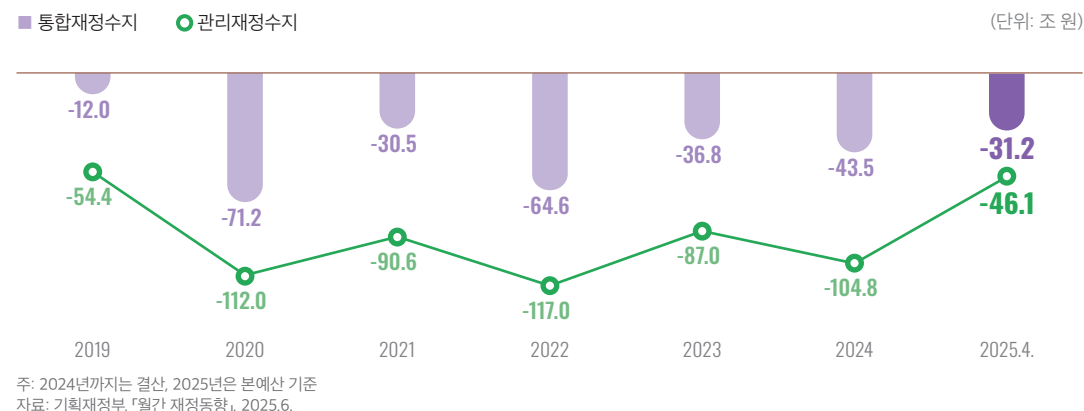
관리재정수지



사회보장성기금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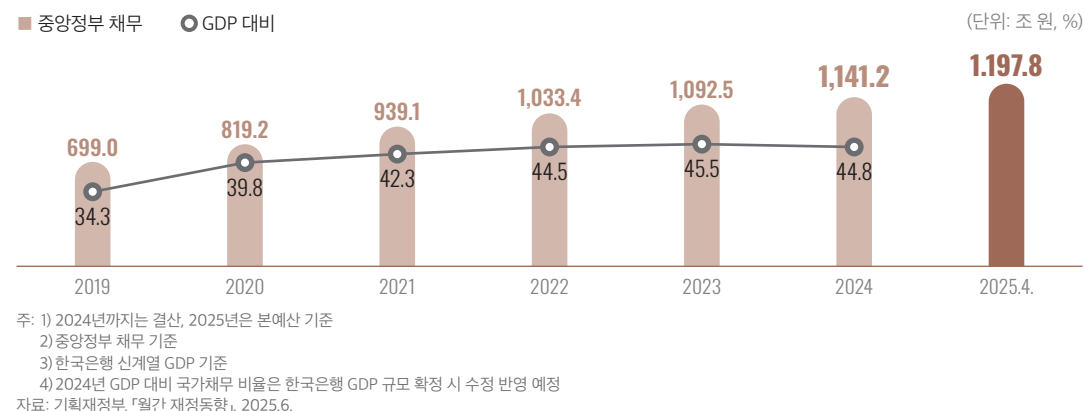


주: 1) 통합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하여 산출
2)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차감하여 산출
3) 사회보장성기금수지는 4개 기금(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의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의미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2025.6.



국가채무

중앙정부 채무





주요국 월간 재정통계

			총수입 ⋮	총지출 ⋮	수지 ⋮
미국 4월 말 기준	회계연도 누적 (7개월 차)	규모	3조 1,105억 달러	4조 1,592억 달러	1조 487억 달러 적자
		전년 동월 대비증감률	4.9%	8.9%	22.6%
독일 4월 말 기준	회계연도 누적 (4개월 차)	규모	1,360억 유로	1,595억 유로	235억 유로 적자
		전년 동월 대비증감률	8.6%	6.6%	-3.7%
일본 3월 말 기준	회계연도 누적 (12개월 차)	규모	102조 2,932억 엔	117조 1,125억 엔	14조 8,193억 엔 적자
		전년 동월 대비증감률	-3.3%	-4.1%	-8.8%
프랑스 4월 말 기준	회계연도 누적 (4개월 차)	규모	1,056억 유로	1,585억 유로	529억 유로 적자
		전년 동월 대비증감률	41.9%	3.3%	-33.1%
영국 4월 말 기준	회계연도 누적 (1개월 차)	규모	916억 파운드	1,118억 파운드	202억 파운드 적자
		전년 동월 대비증감률	6.5%	6.3%	5.2%

**자료 : •미국)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Monthly Treasury Statement : April 2025(5.12. 발표)
•독일) Federal Ministry of Finance, Overview of federal budgetary and financial data up to and including April 2025(5.22. 발표)
•일본) 재무성, 국고 세입세출 상황(5.20.발표). 일반회계 기준이며 수지는 공식 발표치가 없어 세입-세출 잔액으로 자체 계산한 수치임. 일본의 일반회계 수입은 공채(국채)연간 발행 일정 및 이에 따른 수입변동으로 월별 변동이 큼
•프랑스) La situation du budget de l'État au 30 avril 2025(6.3.발표)
•영국) Office of National Statistics, Public sector finances, UK: April 2025(5.22. 발표)

대한민국 4월 말 기준	회계연도 누적 (4개월 차)	규모	231.1조 원	262.3조 원	31.2조 원 적자
		전년 동월 대비증감률	8.3%	0.7%	-33.8%

해외재정동향

재정정보분석센터

주요국

1 | 미국

- 무디스(Moody's)는 미국 정부의 부채 증가와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대규모 감세 추진으로 인해 국가신용 등급을 최고 등급(AAA)에서 한 단계 하향 조정
- 하원 예산위원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감세 및 지출삭감 법안 통과
- 미국과 중국은 상호 부과한 고율 관세를 90일간 일시적 인하 합의했으나, 외국인 철강·알루미늄 관세율을 50%로 두 배 인상 공언

2 | 독일

- 기독당의 신임 재무장관 라르스 클링바일(Lars Klingbeil)은 2025년과 2026년 예산안을 준비하며 각 부처에 예산 절감을 요구
- 독일 연방노동청, 5월 실업자 수 전월 대비 34,000명 증가한 296만 명, 실업률 6.3%로 집계

3 | 일본

- 4월 근원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3.5% 상승하며 2년여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
-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로 인한 경제적 충격 완화 조치로 63억 달러(약 6.3조 엔) 규모의 지원 패키지 승인
- 4월 기준 근로자 기본급은 전년 동월 대비 2.2% 증가해 전월(1.4%)보다 상승폭이 확대

4 | 프랑스

- 중앙은행, 프랑스 경제가 2025년 2분기에 소폭 성장에 그칠 전망
- 정부는 5월 19일 베르사유에서 열린 'Choose France' 정상회의에서 총 370억 유로(약 41조 3천억 원)의 외국인 투자 유치 발표
- 프랑수아 바이루(François Bayrou) 총리는 프랑스의 재정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 삭감 계획을 7월 초에 발표하겠다고 선언

5 | 영국

- 영란은행(Bank of England)은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한 4.25%로 조정
- 2025년 1분기 영국 경제는 전 분기 대비 0.7% 성장하여 영란은행 전망치(0.6%)를 상회
- 영란은행 부총재 사라 브리덴(Sarah Breeden)은 인터뷰에서 영국의 노동시장이 완화되고 있으며, 디스인플레이션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힘

6 | 중국

- 정부는 경제 성장 촉진을 위해 국가 자산을 적극 활용하는 새로운 재정 전략을 도입
-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이 관세전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 통제 전쟁으로 확대되며, 미-중 공급망 전쟁의 새 국면 진입

국제기구

1 | IMF

- “세수 확대를 위한 디지털 기술 활용 (Leveraging Digital Technologies in Boosting Tax Collection)” 보고서 발간
- “IMF TaxFit 모델 방법론 및 사용자 안내서(IMF TaxFit Model Methodology and User Guidebook)” 발간

2 | OECD

- “신생기업, 일자리의 질, 그리고 포용성 (Young Firms, Job Quality and Inclusiveness)” 워킹 페이퍼 발간
- “OECD 경제전망 2025년 제1호 — 불확실성 대응과 성장 회복 (OECD Economic Outlook -Tackling Uncertainty, Reviving Growth)” 보고서 발간

주요국

미국



5.16. 무디스(Moody's)는 미국 정부의 부채 증가와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대규모 감세 추진으로 인해 국가신용등급을 최고 등급(AAA)에서 한 단계 하향 조정¹⁾

- 무디스는 미국 정치권의 장기 재정적 비효율성과 부채 구조 문제, 사회보장·메디케어 재정 부족 등을 우려하며 향후 지속적 재정건전성 개선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
 - 미국은 Fitch(2023년), S&P(2011년)에 이어 3대 신용평가사 모두로부터 최고 등급을 상실
- 트럼프 행정부는 약 3.8조 달러 규모의 감세안을 추진 중이나, 보건의료·친환경 에너지·식품 지원 예산 삭감으로도 부채 증가를 막기 어려운 상황
- 이번 등급 강등으로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소비자 차입 비용 증가, 미국 경제 전반에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제기

5.18. 하원 예산위원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감세 및 지출삭감 법안 통과²⁾

- 해당 법안은 2017년 트럼프 감세의 영구화, 팀·초과근무 소득 면세, 국방·이민 집행 예산 증액, 식품지원·교육·청정에너지 보조금 삭감을 포함하며 총 10년간 3.8조 달러의 비용이 소요될 전망
 - 보수파 의원들은 메디케이드* 근로조건 시행 시기를 앞당기고 청정에너지 세액공제를 추가 축소하는 등의 변경을 요구하며 향후 의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 협상을 예고
- 민주당은 비공개 협상과 불투명한 법안 내용에 강하게 반발했으며, 법안은 다음 단계로 하원 규칙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
 - 법안 통과 과정에서 뉴욕 등 고세율 주를 대표하는 공화당 중도파 의원들도 지방세 공제(SALT) 확대 등을 조건으로 협상력을 행사하고 있어, 최종 합의까지 진통이 예상
- 이번 협상으로 미국은 광물 자원의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우크라이나의 경제 회복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1) <https://www.nytimes.com/2025/05/16/business/us-credit-downgrade-moodys.html>

2) <https://www.nytimes.com/2025/05/18/us/politics/house-republicans-budget-vote-trump-agenda.html>

5.30. 미국과 중국은 상호 부과한 고율 관세를 90일간 일시적 인하 합의³⁾했으나, 미국이 외국산 철강·알루미늄 관세율을 50%로 두 배 인상 공언⁴⁾

-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인하
 - 이번 조치는 무역전쟁으로 인해 기업과 소비자에게 가중된 경제적 부담과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에 대응한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일부 양보한 결과로 평가
- 양국은 희토류 수출 규제 철회, 미국산 제품 추가 구매 논의, 펜타닐 원료 통제 등 다양한 협상 의제를 포함해 후속 협의를 이어갈 예정
 - 그러나 전문가들은 90일간의 임시 협정이 지속 가능한 합의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이며, 구조적 무역 불균형 문제 등 핵심 쟁점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분석
- 관세 유예를 지속하던 중 돌연 5월 30일,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부과하는 관세율을 현행 25%에서 50%로 두 배 인상하겠다고 발표, 6월 4일부터 발효
 - 노조와 일부 정치권에서는 이번 거래가 미국 철강 산업의 고용과 국가 안보에 미칠 영향을 우려

독일



5.19. 신임 재무장관 라르스 클링바일(Lars Klingbeil)은 2025년과 2026년 예산안을 준비하며 각 부처에 예산 절감을 요구⁵⁾

- 작년 11월 연합 정부가 붕괴하면서 2025년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어 독일은 올해 임시예산으로 운영 중
 - 인프라 투자 확대(5,000억 유로 규모)와 국방예산 예외적 지출 허용에도 불구하고 긴축 기조는 유지됨
- 독일 정부는 러시아로부터의 안보 위협과 2년 연속 경기 침체라는 경제적 난관 속에서 경제 구조 개혁과 지속가능한 성장 경로 복원을 주요 목표로 설정
 - 2025년 예산 초안은 6월 25일 내각 승인 후 7월 의회 논의, 9월 최종 승인 예정이며, 2026년 예산은 7월 30일 초안 승인 후 연내 의회 통과 일정이 계획
 - 재무부는 이번 예산 작업을 통해 독일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신속히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

3) https://www.nytimes.com/2025/05/12/business/china-us-tariffs.html?campaign_id=60&emc=edit_na_20250512&instance_id=154354&nl=breaking-news®i_id=211159131&segment_id=197772&user_id=438d364d7c6a02bda9c08a9c46741bf9

4) https://www.nytimes.com/2025/05/30/us/politics/trump-steel-tariffs-nippon.html?algo=editorial_importance_fy_email_news&block=4&campaign_id=142&emc=edit_fory_20250531&fallback=false&img_id=1671389022590175&instance_id=155663&nl=for-you&nid=211159131&pool=fye-top-news-ls&rank=4®i_id=211159131&req_id=1086010965733897&segment_id=199056&surface=for-you-email-news&user_id=438d364d7c6a02bda9c08a9c46741bf9&variant=0_edimp_fye_news_dedupe

5) <https://www.reuters.com/world/germany-pushes-ahead-with-budget-preparations-savings-encouraged-document-shows-2025-05-19/>

일본



5.28. 연방노동청, 5월 실업자 수 전월 대비 34,000명 증가한 296만 명, 실업률 6.3%로 집계⁶⁾

- 실업률은 6.3%로 전월과 동일하게 유지되었지만, 이는 팬데믹 시기를 제외하면 2015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분석가들이 예상한 10,000명 증가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
- 노동청장 안드레아 나흘레스(Andrea Nahles)는 “노동시장이 추세 반전을 위한 추진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며, 여름철에도 실업자 수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
 - 5월의 구인 공고는 634,00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7,000건 감소하여 노동 수요의 약화를 나타냄

5.22. 4월 근원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3.5% 상승하며 2년여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⁷⁾

- 일반 소비자물가지수(CPI)에서 가격 변동성이 크고 일시적인 품목(주로 에너지·식품)을 제외한 물가지수
- 이는 시장 예상치인 3.4%를 상회하며, 3월의 3.2% 상승률보다 가속화된 수치
 - 특히 쌀 가격이 전년 대비 98.6% 급등하는 등 식품 가격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
- 이러한 물가 상승 압력은 일본은행(BOJ)이 금리 인상을 고려 가능성을 높임
 - 다만, 미국의 관세 정책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해 경기 성장 전망이 불확실해져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여부는 불투명

5.27.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로 인한 경제적 충격 완화 조치로 63억 달러(약 6.3조 엔) 규모의 지원 패키지 승인⁸⁾

- 이번 지원금은 중소기업 재정 지원 및 가계 에너지 비용 보조에 사용
 - 자동차 부문은 이미 미국의 25% 자동차·부품 관세로 큰 타격을 받고 있음
- 도요타는 4~5월에만 13억 달러 규모(약 1.7조 원)의 손실을 예상하며, 닛산은 일본 내 공장 2곳 폐쇄와 미국 생산 이전을 고려 중
 - 정부는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경기 둔화, 물가 상승, 국가 부채 문제로 정치적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

6) <https://www.reuters.com/markets/europe/german-unemployment-rises-by-more-than-expected-may-2025-05-28/>

7) <https://www.reuters.com/markets/europe/japans-core-inflation-hits-more-than-2-year-high-keeps-boj-under-pressure-2025-05-22/>

8) <https://www.nytimes.com/2025/05/27/business/japan-economy-trump-tariffs.html?searchResultPosition=1>

프랑스



6.4. 4월 기준 근로자 기본급은 전년 동월 대비 2.2% 증가해 전월(1.4%)보다 상승 폭이 확대⁹⁾

- 실질 임금은 물가 상승의 영향으로 1.8% 감소해 4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는데, 이는 소비자들의 구매력 약화를 의미
 - 명목 임금 전체는 2.3% 늘었으나, 시장 예상치(2.6%)에는 다소 하회
- 임금 상승세는 일본은행(BOJ)이 추가 금리 인상을 검토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음
 - 임금 상승에도 불구하고 실질임금이 줄어든 것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히 크다는 신호로, 일본 경제는 임금 인상, 물가 상승, 소비 둔화 등 복합적 도전에 직면함

5.13. 중앙은행, 프랑스 경제가 2025년 2분기에 소폭 성장에 그칠 전망¹⁰⁾

- 주요 원인으로는 5월의 연휴와 국제 무역 긴장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지목
 - 서비스 및 산업 부문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는 반면, 건설 및 에너지 부문은 둔화, 특히 수출 중심의 제조업체들은 미국의 관세 인상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으며, 와인 산업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
- 가격 측면에서는 제조업체들이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서비스 부문에서는 소폭의 가격 상승이 보고됨
 - 이러한 전망은 프랑스 경제의 회복세가 여전히 미약하며, 무역 긴장과 같은 외부 요인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시사

5.19. 정부는 5월 19일 베르사유에서 열린 ‘Choose France’ 정상회의에서 총 370억 유로(약 41조 3천억 원)의 외국인 투자 유치 발표¹¹⁾

- 200억 유로는 신규 투자로, 방위산업, 에너지, 인공지능(AI) 등 다양한 분야 포함
 - 나머지 170억 유로는 2월에 열린 AI 정상회의에서 이미 약속된 투자로, AI 인프라 구축에 중점
- 미국의 물류 기업 Prologis는 파리에 4개의 데이터 센터 건설에 64억 유로를 투자할 예정이며, 영국의 핀테크 기업 Revolut는 향후 3년간 프랑스 시장 확대를 위해 10억 유로를 투자하고 프랑스 은행 라이선스를 신청할 계획
 - 프랑스 정부는 이러한 투자를 통해 산업 일자리 감소를 완화하고, 2025년 경제성장률 목표인 0.7%를 달성하려는 의지를 보임

9)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5-06-04/japan-s-base-pay-grows-faster-backing-case-for-boj-rate-hike>

10) <https://www.reuters.com/markets/europe/french-economy-grow-only-slightly-second-quarter-central-bank-2025-05-13/>

11) <https://www.reuters.com/en/choose-france-summit-should-bring-37-bln-euros-investments-says-finance-minister-2025-05-19/>

영국



5.27. 프랑수아 바이루(François Bayrou) 총리는 프랑스의 재정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 삭감 계획을 7월 초에 발표하겠다고 선언¹²⁾

- 총리는 BFM TV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적자를 쌓아왔고, 산더미 같은 부채를 허용해 왔다. 이 나라는 과도한 부채에 시달리고 있다”고 언급하며, 모든 국민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
- 현재 바이루의 중도 정부는 2026년까지 재정적자를 GDP의 4.6% 이내로 줄이기 위해 400억 유로의 예산 절감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치적 지지가 부족한 상황
- 이러한 계획은 지난해 지출 증가와 세수 감소로 인해 악화된 재정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

5.8. 영란은행(Bank of England)은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한 4.25%로 조정¹³⁾

- 이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과 경제 성장 둔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
- 인플레이션이 3.5%로 상승하고 임금 성장률이 둔화되는 등의 경제 지표를 반영한 결정
- 통화정책위원회(MPC)는 5대 4의 찬성으로 금리 인하를 결정했으며, 일부 위원은 0.5%p의 더 큰 폭 인하를 주장
- 영란은행은 향후 금리 인하에 대해 “점진적이고 신중한 접근”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힘

5.15. 2025년 1분기 영국 경제는 전분기 대비 0.7% 성장하여 영란은행 전망치(0.6%)를 상회¹⁴⁾

-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회복, 5.9% 증가한 기업 투자(2년 만에 최대)가 성장세를 견인
- 1인당 실질 GDP도 0.5% 증가해 국민 체감 경기 개선이 확인
- 재무장관 레이철 리브스는 “영국 경제가 올 1분기 G7 주요국 중 가장 빠르게 성장했다”고 밝혔으나, 향후 고용세 인상과 트럼프발 관세 등으로 경기 둔화가 예상
- 영란은행(BoE)은 이번 성장세가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으며, 올해 연간 성장률은 1% 수준, 2027년까지 1.5%에 이를 것으로 전망
- 미·영 간 새 무역협정으로 대다수 영국산 제품에는 10%의 신규 관세가 적용돼 하반기 경제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12) <https://www.reuters.com/markets/europe/french-pm-bayrou-says-he-will-unveil-budget-cutting-proposals-early-july-2025-05-27/>

13) <https://uk.finance.yahoo.com/news/bank-of-england-interest-rate-cuts-111634635.html>

14) <https://www.reuters.com/sustainability/sustainable-finance-reporting/uk-economy-beats-forecast-grow-by-02-march-0ns-says-2025-05-15/>

중국



5.31. 영란은행 부총재 사라 브리든(Sarah Breeden)은 인터뷰에서 영국의 노동시장이 완화되고 있으며, 디스인플레이션(물가 상승률 둔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힘¹⁵⁾

- 브리든 부총재는 실업률이 소폭 상승하고 경제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러한 경제 상황을 고려해 5월 통화정책위원회(MP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p 인하
- 향후 금리 경로에 대해 미리 정해진 계획은 없다고 강조하면서도, 시장에서 예상하는 추가 금리 인하 전망과 중앙은행의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밝힘
- 현재 금융시장에서는 연말까지 0.25%p씩 한두 차례 추가 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예상

5.21. 정부는 경제 성장 촉진을 위해 국가 자산을 적극 활용하는 새로운 재정 전략을 도입¹⁶⁾

- 중국은 2025년 공식 재정 적자 목표를 GDP의 4%로 설정했으며, 실제 적자는 9.9%에 이를 것으로 예상
- 이를 위해 11.2조 위안 규모의 특별 국채를 발행하여 소비자 보조금 및 인프라 투자에 사용
- 정부는 국유 기업 지분 등 국가 자산의 가치를 184조 위안(GDP의 136%)으로 평가하며, 이를 재정 건전성의 근거로 평가
- 지방정부는 국유 자산을 담보로 활용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있으며, 중앙정부는 국유 기업의 배당 확대와 자산 매각을 독려
- 이러한 변화는 중국의 재정 전략이 부채 중심에서 자산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나타내며, 향후 대규모 재정 부양책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

6.3.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이 관세전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 통제 전쟁으로 확대되며, 미·중 공급망 전쟁의 새 국면 진입¹⁷⁾

- 중국은 최근 미국의 항공·반도체 기술 수출 제한 조치에 대응해 희토류 수출을 제한하여 미국 첨단 제조업에 타격
- 희토류 확보에 어려움을 겪은 포드사는 공장 가동을 일시 중단했으며, 미 국방부 등은 국내 광물 공급망 구축을 추진 중이나 광산 개발에 수십 년이 걸릴 전망

15)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5-06-01/boe-s-breeden-believes-uk-labor-market-loosening-sunday-times>

16) <https://www.reuters.com/markets/asia/china-stimulus-lies-behind-great-wall-assets-2025-05-21/>

17) <https://www.nytimes.com/2025/06/03/business/economy/us-china-trade-supply-chains.html>

국제기구

IMF



- 미·중은 최근 제네바 협상에서 관세 인하에 합의했으나, 미국은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자연 이행”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중국은 미국이 화웨이 제재 등으로 합의를 위반했다고 대응
- 전문가들은 양국의 상호 의존도가 여전히 높고, 미국이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수백억 달러 규모 투자와 국제 협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5.9. “세수 확대를 위한 디지털 기술 활용 (Leveraging Digital Technologies in Boosting Tax Collection)” 보고서 발간¹⁸⁾

- 기업의 디지털화가 세수 증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국가 수준과 기업 수준에서 실증적으로 분석
 - 기업이 디지털화될수록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납부 수준이 증가하며, 국세청(GovTech)의 디지털 역량이 높은 국가에서는 이러한 효과가 더욱 강화
 - 특히 서비스업과 소규모비공식 기업에서 디지털화가 세수 준수(compliance)를 높이는 주요 채널로 작용
- 국가 간 분석에서는 기업 디지털화가 GDP 대비 세수 비율을 최대 3%p까지 높일 수 있으며, 기업 수준에서는 매출 대비 세금 비중도 유의미하게 증가
 - GovTech와 기업 디지털화를 병행 추진하는 ‘이중 접근 전략’을 권고하며, 이는 중장기적으로 투자 비용을 상쇄할 만큼 높은 세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결론

5.5. “IMF TaxFit 모델 방법론 및 사용자 안내서(IMF TaxFit Model Methodology and User Guidebook)” 발간¹⁹⁾

- IMF의 TaxFit 모델은 개인 소득세와 사회보장 기여금, 복지 혜택 등을 모의계산하는 마이크로 시뮬레이션 도구로서, 사용자 입력에 기반해 가상의 가구별 세부담과 복지 혜택을 계산
 - 이를 통해 국가 간 세제 및 복지 시스템의 부담(세율)과 혜택수준을 비교할 수 있으며 개별 국가에 대한 정책 분석이나 제도 개혁 시뮬레이션도 가능
- 해당 모델은 기존 OECD TaxBEN, EUROMOD가 적용이 되지 않던 신흥시장 및 개발도상국 (EMDEs) 21개국에 대해 분석 기능을 추가해 제공
 - TaxFit은 개인별, 가구별 세후 소득 분포를 반영하는 지표(ETR, METR, Kakwani index 등)를 산출하며, 정책 변화가 노동시장 참여(특히 여성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까지 분석할 수 있음

18) <https://www.imf.org/en/Publications/WP/Issues/2025/05/09/Leveraging-Digital-Technologies-in-Boosting-Tax-Collection-566807>

19) <https://www.imf.org/en/Publications/TNM/Issues/2025/05/05/IMF-TaxFit-Model-Methodology-and-User-Guidebook-561606>

OECD



5.14. “신생기업, 일자리의 질, 그리고 포용성 (Young Firms, Job Quality and Inclusiveness)” 워킹 페이퍼 발간²⁰⁾

- 프랑스와 포르투갈의 고용주-근로자 연계 데이터(LEED)를 활용하여 신생기업(설립 5년 이하)이 고용하는 일자리의 질과 포용성을 분석
 - 연구 결과, 신생기업은 유사한 근로자를 비교할 경우 오히려 소폭의 임금 프리미엄과 더 안정적인 계약(무기한 계약)을 제공하는 경향
 - 또한, 신생기업에서는 성별 임금 격차가 기존 기업보다 일관되게 낮게 나타나지만, 여성 고용 비율은 크게 높지 않음
- 외국 출생자 및 외국인의 고용 비율은 신생기업에서 더 높지만, 이들의 임금 격차는 오히려 기존 기업보다 더 큰 편
 - 이러한 결과는 창업 장벽 완화 및 기업 역동성 촉진 정책이 포용적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

6.3. “OECD 경제전망 2025년 제1호 — 불확실성 대응과 성장 회복 (OECD Economic Outlook - Tackling Uncertainty, Reviving Growth)” 보고서 발간²¹⁾

- 2025년과 2026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2.9%로 하향 조정되었으며, 이는 무역장벽 상승, 금융 긴축, 정책 불확실성 증가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
 - 미국과 주요 교역국 간 관세 인상으로 인해 세계 교역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소비자물가 상승 압력을 높이고 글로벌 공급망에도 영향
- OECD는 무역장벽 완화, 신뢰 회복을 위한 정책 명확화, 재정건전성 회복, 투자 활성화 등 종합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언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민간 및 공공 투자 부진이 성장과 생산성을 제한해 왔으며, 구조개혁과 규제 완화, 디지털·에너지·주거 인프라 투자 확대가 중요
 - 미국과 중국은 관세 영향으로 성장 둔화가 예상되며, 독일·일본·영국 등은 방위 및 인프라 지출 확대를 통해 일정 부분 경기부양 효과가 기대

20)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young-firms-job-quality-and-inclusiveness_a6bb0f3a-en.html

21)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oecd-economic-outlook-volume-2025-issue-1_83363382-en/full-report/editorial-tackling-uncertainty-reviving-growth_dd3ccfc4.html

06

2025
June

Fiscal Calendar



재정

정부출자기관의 2025년 정부배당 확정(기획재정부, 5.30.)

- 정부는 2024회계연도 실적을 바탕으로 40개 정부출자기관에 대한 정부배당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공표
- 올해 정부배당은 배당 대상기관의 당기순이익 규모, 기관의 재무건전성 및 안정적 경영에 필요한 자금 등을 고려하여 각 기관 및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결정
- 2025년 정부배당 결과 40개 정부출자기관 중 정부배당을 실시한 기관은 21개 기관이며, 나머지 19개 기관은 당기순손실 발생, 이월결손금 보전 등으로 배당 미 실시
- 정부배당금액을 전년(2조 1,322억 원) 대비 1,665억 원 증가한 2조 2,987억 원이며, 평균 배당성향(총배당금/당기순이익)은 39.72%로 전년(39.87%)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



경제

2025년 경제전망(한국은행, 5.30.)

- 올해 성장률 전망 1.5%(2월)→0.8%(5월)로 큰폭하향조정
- 내수 회복이 지연된 데다, 美 관세 영향으로 수출 둔화폭이 확대될 전망, 향후 성장경로는 무역협상과 관련한 상방과 하방, 양방향의 리스크가 존재하며, 경기부양책 여부와 강도에도 크게 영향받을 전망
-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1.9%로 안정세를 지속할 전망
- 가공식품 및 서비스 가격 인상 등의 상방압력을 국제유가 하락, 낮은 수요 압력 등이 상쇄
- 향후 물가경로는 국내외 경기 흐름, 환율 및 국제유가 움직임,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예상

2025년 5월 소비자물가동향(통계청, 6.4.)

- 5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1% 하락, 전년 동월 대비 1.9% 상승
- 식료품및에너지제외지수는 전월 대비 0.2%, 농산물 및 석유류제외지수는 전월 대비 0.2% 각각 상승
- 생활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1%, 신선식품지수는 전월대비 6.1% 각각 하락

재정

- 2026년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각 중앙관서 → 기획재정부)
- 2024년 세법개정후속 시행령 개정

경제

- 2025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 통계청 2024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발표
- 한국은행 2024년 4/4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 총생산(속보) 발표

국제

- 세계은행(WB) 세계경제전망발표
- 국제통화기금(IMF) 수정경제전망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발표

1월

재정

- 2024년 총세입-총세출 마감
- 2024년 결산보고서 제출 (각 중앙관서 → 기획재정부)

국제

- OECD 중간경제전망(Interim Economic Outlook) 발표

2월

재정

- 2026년 예산안 편성지침 통보 (기획재정부 → 각 중앙관서)

경제

- 한국은행 2024년 4/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 발표

3월

재정

- 2024년 결산 감사 의뢰 (기획재정부 → 감사원)

경제

- 한국은행 2025년 1/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발표

국제

-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발표
-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 발표

4월

재정

- 2026년 예산요구서 제출 (각 중앙관서 → 기획재정부)
- 2024년 국가결산보고서 제출(정부 → 국회)
- 2024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발간
- 2024년 기금운용평가결과 발표

경제

- 통계청 2025년 1/4분기지역경제동향 발표
- 통계청 2025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발표
-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발표

국제

- OECD 경제전망 (Economic Outlook) 발표

5월

경제

- 한국은행 2025년 1/4분기 국민소득(잠정) 발표
- 통계청 2025년 경제통계 통합조사 실시

국제

- 세계은행(WB) 세계경제전망 발표

6월

재정

- 2025년 세법개정안 발표

경제

- 202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 한국은행 2025년 2/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 발표
- 통계청 2025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 발표

국제

- 국제통화기금(IMF) 수정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발표

7월

재정

- 2026년 국유재산종합계획 제출

경제

- 통계청 2025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 한국은행 경제전망 발표

8월

재정

- 2026년 예산안 제출(정부 → 국회)
-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발표

경제

- 한국은행 2025년 2/4분기 국민계정(잠정) 발표

국제

- OECD 중간경제전망(Interim Economic Outlook) 발표

9월

경제

- 한국은행 2025년 3/4분기 실질국내총생산(속보) 발표

국제

-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발표
-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 발표

10월

경제

- 통계청 2025년 3/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국제

- OECD 경제전망보고서(Economic Outlook) 발표

11월

재정

- 2026년 예산 확정

경제

- 한국은행 2025년 3/4분기 국민계정(잠정) 발표

12월

그림으로 구현한 ‘미국인의 얼굴’

오늘날 우리가 미국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마천루로 빼곡한 도심의 모습은 20세기 초반 급격한 경제 성장의 상징이다. 하지만 이 마천루가 신기루였던 것 마냥 1929년 대공황이 발생하고 미국은 극심한 경제 침체를 겪게 된다. 바로 이 시기의 미국, 어쩌면 ‘가장 미국적인 미국이자 미국인의 고향’ 같은 모습이 한 그림에 담긴다.

글·전원경 예술 전문 작가, 세종사이버대 교수



01 아메리칸 고딕

그랜트 우드, 1930년, 캔버스에 유채, 78 x 65cm, 시카고 아트 인스티튜트, 시카고



02 Grand Central Terminal, New York - the gateway to a continent New York Central Lines

Earl Horte, 1920년

미국은 1776년부터

그 역사가 시작된

신생국이다.

역사가 짧으니

국가적인 이미지를 담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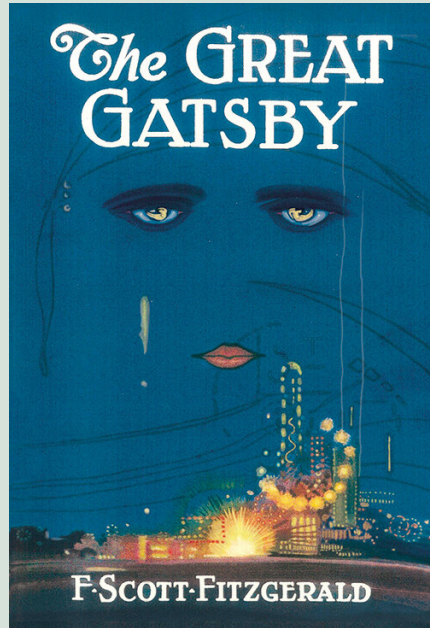
예술 작품이 창작될 수 있는

시간도 상대적으로

짧을 수밖에 없었다.

‘미국 미술’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의 머릿 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는 그리 분명하지 않다. 풍요롭지만 고독한 도시인의 삶을 표현한 에드워드 호퍼의 회화나, 거리의 낙서를 예술의 영역으로 승화시킨 ‘검은 피카소’ 장 미셸 바스키아의 그림들이 어렵듯이 떠오를 뿐이다. 유럽이나 아시아 국가들과는 달리 미국은 1776년부터 그 역사가 시작된 신생국이다. 역사가 짧으니 국가적인 이미지를 담은 예술 작품이 창작될 수 있는 시간도 상대적으로 짧을 수밖에 없었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미국의 건국을 주도한 세력이 청교도적 이념을 따르고 있었다는 점이다. 근검절약과 종교적 경건함을 모토로 하는 청교도는 문화예술을 사치, 방종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해악으로 여겼다. 1760년대 미국 의회는 도박, 경마, 투계와 함께 모든 쇼와 연극을 금지했다. 초기 정착기에는 크리스마스 파티조차 허용되지 않았을 정도였다. 이처럼 엄격한 분위기에서 독자적인 문화가 꽃피기는 힘들었다. 자연스럽게 미국의 문화예술은 한때 이들의 본국이었던 영국의 전통을 베끼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F. 스콧 피츠제럴드의 소설

‘위대한 개츠비’

역시 번영과 부유함에

중독되다시피 했던

1920년대의 경향을

느끼게끔 해준다.

03 F. 스콧 피츠제럴드의 소설 ‘위대한 개츠비’의 초판본 표지

1925년

변화가 본격적으로 일어난 것은 20세기 초반부터다. 이 무렵 미국은 1차 세계대전 이후로 폭발적인 성장을 겪고 있었다. 뉴욕과 시카고에 하루가 다르게 고층빌딩들이 들어섰고 주식 시장의 폭등으로 백만장자들이 속출했다. 미국은 저돌적인 성장을 거듭했으며 뉴욕을 중심으로 풍요로운 분위기를 흥청망청하며 즐기는 젊은이들이 나타났다. 미국 화가 조지 벨로스가 그린 ‘템시와 퍼포’는 ‘재즈의 시대’라고도 불리는 1920년대 초반 미국의 분위기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상대를 때려눕히는 권투 선수의 격렬한 펀치와 환호하는 군중들의 열기가 생생하게 느껴지는 이 그림처럼 당시의 미국인들은 성장과 승리에 흥분해 있었다. 이즈음 출판된 F. 스콧 피츠제럴드의 소설 ‘위대한 개츠비’ 역시 번영과 부유함에 중독되다시피 했던 1920년대의 경향을 느끼게끔 해준다.

그러나 낙관적인 분위기는 오래가지 못했다. 1929년의 주식 시장 붕괴와 함께 대공황이 전 세계를 강타했다. 미국 역시 예외일 수 없었다. 특히 넓은 평원으로 이루어진 미국 중부의 소작농들은 그 전부터 잉여 생산된 농작물의 처리에 골머리를 썩이고 있었는데 대공황으로 이 소작농들은 큰 부채를 끌어안으며 몰락하게 된다. 설상가상으로 1929년과 이듬해에 걸쳐 유례없는 가뭄이 미국을 덮쳤다. 미국이라는 나라의 결정적 이점이던 풍요와 기회가 갑자기 눈앞에서 사라지고 만 셈이다. 성장과 번영에서 삽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상황에서 미국인들은 안정의 상징 같은 시골 농가의 삶에 새삼 주목하게 된다. 어찌 보면 ‘가장 미국적인 그림’인 ‘아메리칸 고딕’은 경제 대공황의 혼돈과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 속에서 탄생한 그림이다.

무뚝뚝한, 그러나 견고한 미국인의 초상

1930년 8월, 화가 그랜트 우드(1891~1942)는 아이오와주의 소도시 엘턴을 운전해 가다 가파른 지붕에 외벽이 흰 판자로 되어 있는 집 한 채를 발견했다. 자신이 어린 시절 살았던 집과 어딘지 모르게 유사해 보이는 집이었다. 우드는 차에서 내려서 들고 있던 판자 뒤편에 재빨리 집을 스케치했다. 우드는 이 집이 전형적인 미국 중부 농가의 이미지, 견고하고 보수적이며 세파에 흔들리지 않는 미국의 모습을 상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우드 본인부터가 이러한 시골 풍경에 익숙했다. 우드는 아이오와주 동부의

작은 마을 애나모사의 농장에서 태어나 성장했고 미네아폴리스와 시카고의 미술 학교에서 그림을 배웠다.

여느 미국인 화가들처럼 우드 역시 성공하기 위해서는 유럽의 회화를 배워야 한다고 여겼다. 시카고의 미술 학교를 중퇴한 우드는 1920년부터 1927년까지 세 번이나 유럽 여행을 떠났다. 그러나 파리와 뮌헨에서 체류하며 그는 ‘유럽보다는 오히려 고향 마을에서 우유를 짜던 시절에 더 좋은 아이디어들이 떠올랐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이오와로 돌아왔다.



04 템시와 퍼포

조지 벨로스, 1924년, 캔버스에 유채, 129 x 160cm, 휘트니 미술관, 뉴욕



05 New York ; the upper bay from lower Manhattan. New York Central Syst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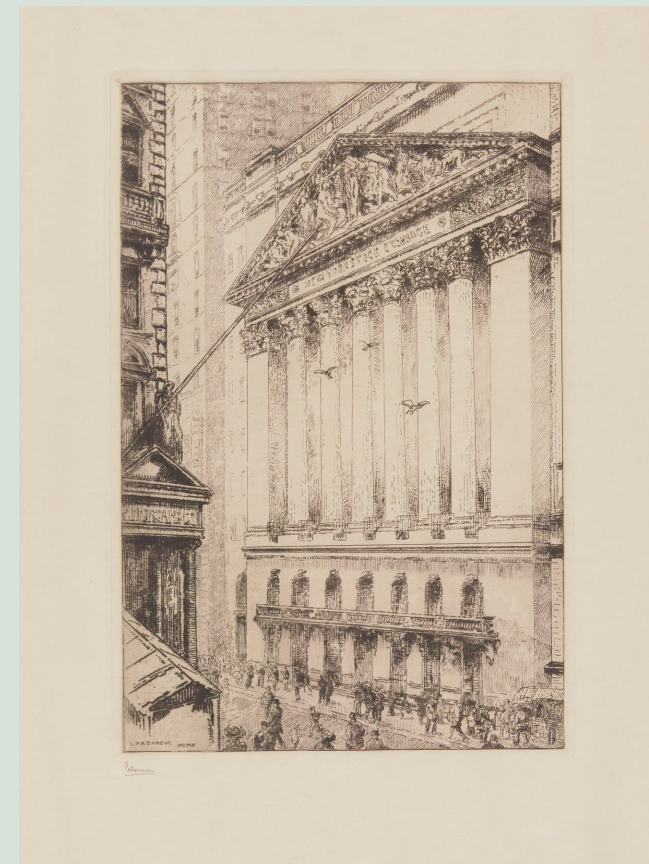
Leslie Ragan, 1920년

유럽의 화가들을 흉내 내기보다는 자신이 잘 아는 세상을 솔직하게 그리는 편이 더 낫겠다는 것이 그가 유럽에서 내린 결론이었다. 그런 와중에 화가의 눈에 이상향에 가까운 집이 드인 것이다.

우드는 이 집과 어울리는 미국인 남녀를 찾아내 집과 함께 그려보겠다는 아이디어를 발전시켰다. 집 앞에 선 남녀는 언뜻 부부처럼 보이지만 우드가 의도한 인물은 나이 든 아버지와 결혼하지 않은 딸이었다. 동그란 안경을 쓰고 쇠스랑을 든 남자는 우드의 치과 의사 바이런 매키비를 모델로 그린 것이다. 남성의 왼편에 선 여성의 모델은 화가의 여동생 낸이었다. 두 사람 모두 무표정이라기보다 얼굴을

살짝 찌푸린 듯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 이 점이 오히려 그림의 사실성을 강조하는 듯하다.

우드는 두 남녀의 의상을 그리는 데도 고심을 거듭했다. 남자는 칼라가 없는 작업복 셔츠에 낡은 양복 재킷을 걸치고 있으며 여자는 수수한 드레스 위에 앞치마를 입었다. 네크라인에 단 카메오 브로치는 할머니나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집안의 패물을 연상케 한다. 집과 남녀, 의상 모두에서 우드가 의도한 바는 ‘미국인의 고향 이미지’를 창조하는 데에 있었다. 1930년의 미국은 공황이라는 경제 위기에서 채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다. 위기에 빠진 미국인에게 기댈 수 있는 고향 집과 그 고향을 지키는 가족의



06 New-york stock exchange

Jean-Émile Laboureur, 1910년

모습이 필요했다. 우드는 바로 그 같은 ‘미국인의 고향’을 그림으로 구현해 내는 데에 성공한 것이다. ‘아메리칸 고딕’은 1930년 시카고 아트 인스티튜트의 ‘미국 회화 및 조각 전시’에서 처음 공개되었다. 그림을 본 관람객들은 엄격하고 뻣뻣한 듯한, 그러나 어딘지 모르게 낯익은 그림 속의 집과 인물들에게 매료되었다. 일부 평론가들은 이 그림이 미국인을 풍자하기 위해 그려졌다고 비판했지만 그보다는 ‘본질적인 미국인’을 그림이 구현했다는 평이 더 우세했다. 비평가인 크리스토퍼 폴리는 “그 슬프고 광적인 얼굴에서 우리는 미국의 무언가를,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읽어낼 수 있다”고

평했다. ‘아메리칸 고딕’은 가장 미국적인 표상으로 일컬어지며 화가에게 영원한 명성을 안겨다 주었다. ‘아메리칸 고딕’의 배경이 된 아이오와주 엘던의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있다. 하나도 특별할 것 없는 보통의 낡은 집이지만, 수많은 미국인 관광객들이 이 집을 찾아와 그림 속 남녀와 비슷한 포즈를 취하고 사진을 찍는다. 그들은 그림 속 평범한 집과 남녀의 모습에서 가장 진정한 미국인의 얼굴을, 자신들의 분신을 발견한 것이 분명하다.



자연독점에 대한 시각: 규모의 경제 vs. 거래비용

글·옥동석 인천대학교 명예교수, 前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경제학 교과서들은 한결같이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가 있으면 ‘자연독점(natural monopoly)’이 된다고 설명한다. ‘규모의 경제’란 생산요소의 투입 규모가 증가할 때마다 평균비용이 지속하여 하락하는 현상을 말한다. ‘규모의 경제’로 기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생산비용이 하락한다면, 시장수요 전체를 감당하는 단 하나의 기업이 존재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다. 다시 말해,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규모가 가장 큰 기업의 비용 경쟁력이 가장 높기 때문에 시장에서 경쟁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독점이 형성될 것이다.

경제학 강의 시간에 많은 학자들은 자연독점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전기, 통신, 가스, 상하수도,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을 들고 있다. 이들 산업에서는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는 네트워크에 대규모 자본자산이 소요되고 그 규모가 커질수록 평균비용은 계속 하락한다. 이들은 개인들의 생활에 필수적인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유틸리티(utilities) 산업으로도 불리는데, 이들 산업에 필요한 대규모 자본자산들은 경제활동의

기반이 된다는 의미에서 사회기반시설 또는 인프라(infrastructure) 시설로 불린다. 그리고 이들 산업이 현실적으로 공기업 형태로 많이 운영되는 이유는 이들이 ‘자연독점’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자연독점에 대한 전통적 시각

<그림 1>은 자연독점에 대한 전통적인 분석을 표현하고 있다. 가격(P)과 산출량(Q) 공간에서 시장수요(D)는 우하향하고, 시장수입(MR)은 시장수요보다 더 가파르게 감소하는 점선 형태가 된다. 이 재화의 생산에서는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기에 평균생산비용(AC)과 한계생산비용(MC)은 지속적으로 하락한다. 이 독점기업의 이윤극대화 생산량은 $MR=MC$ 의 조건에 따라 Q_1 에서 성립하고, 이 기업의 수지균형 생산량은 $P=AC$ 의 조건에 따라 Q_2 가 된다. 그런데 사회적 적정생산량은 한계지불용의(P)가 한계생산비용(MC)과 일치하는 수준에서 결정되기에 Q^* 에서 성립한다. 이러한 Q^* 에서는 평균생산비용이 가격을 초과하기 때문에 손실이 불가피한데, 이것이 자연독점 기업의 정책적 딜레마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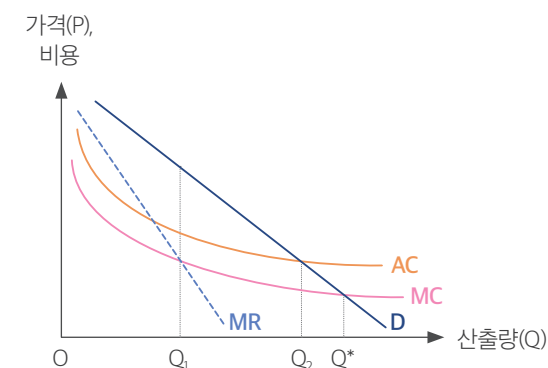
자연독점에 대한 전통적인 해결방안은 네 가지 형태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독점을 허용하지 않도록 이 기업을 수많은 소규모 기업으로 분할하여 서로 경쟁하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독점을 허용하되 가격을 평균생산비용 또는 한계생산비용과 일치하도록 정부가 규제하는 것이다. 만약 정부가 가격을 한계생산비용으로 규제하고자 한다면 그에 따른 손실은 정부가 보전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정부가 독점기업을 직접 소유 경영하며 한계비용 가격책정을 유지하는 것인데, 이 경우에 나타나는 공기업의 손실도 정부가 보전

해야 한다. 넷째, 어떠한 형태의 정부개입도 배제하면서 민간기업의 독점을 허용하는 자유방임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 네 가지 대안들은 각각의 장단점을 갖고 있다. 첫 번째 방법은 비용절감을 위한 기업들의 규모경쟁을 사실상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생산물의 가격은 매우 높아질 것이다. 두 번째 방법에서는 정부 규제기관이 민간기업에 반드시 포획(capture)됨으로써 비용절감과 기술혁신의 유인은 사라지고 독점적인 기득권만 남게 될 것이다. 세 번째 방법 역시 두 번째 방법의 단점을 가지는데, 기업 경영이 민간인에서 정치인으로 바뀌며 정치적 기득권으로 바뀔 것이다. 네 번째 방법은 생산물의 가격은 높고 공급량은 부족하기에 소비자들의 후생을 제한하지만, 독점이윤을 허용함에 따라 비용절감과 기술혁신의 유인은 존재하게 될 것이다.

네 가지 정책 대안 중에서 무엇이 선택될 것인지 그 사회의 산업발전 역사, 각각의 장단점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에 크게 좌우될 것이다. 그런데 이 선택에서 무엇보다도 결정적인 변수는 정책을 결정하는 정치인과 관료들 그리고 이들을 둘러싼

그림 1 | 자연독점에 대한 전통적 시각



이익집단들의 정책적 선호이다. 소위 ‘철의 삼각형(iron triangle)’으로 불리는 이들 세 집단이 가장 선호하는 대안은 이들 집단에 이익을 집중시키면서 그 부담을 경제 전체로 분산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표적으로 납세자들에게- 비용을 전가하면서 정치인, 관료, 이익집단에 이익을 집중시키는 대안이 가장 선호될 것이다. 이것은 어쩌면 공기업이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부각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Ⅰ 기술 및 산업의 변화

자연독점에 대한 이러한 전통적 시각은 1980년대 이후 많은 비판을 받았다. 가장 먼저 제기되었던 비판은, ‘규모의 경제’가 기술적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대와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해당 산업이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실증적으로 엄격하게 분석되어야 한다. 시장에 대한 면밀한 분석도 없이 막연한 추측만으로 ‘규모의 경제’를 전제하고 사회기반시설의 개념을 남발하는 것은, 정부개입을 무분별하게 인정하여 자율적인 산업 발전을 억제하는 장애가 될 것이다.

이러한 비판의 타당성은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입증될 수 있다. 예컨대 통신산업에서의 유선통신 네트워크가 과거에는 막대한 토지와 자본설비를 필요로 하였지만 점차 극초단파, 광섬유, 인공위성 등 다양한 대안이 등장하면서 경쟁이 충분히 가능한 산업으로 변화하였다. 전력산업에서도 터빈 기술의 발달로 전력생산의 효율적인 규모가 점차 축소하면서 발전소 사이의 경쟁이 얼마든지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전력산업을 발전, 장거리 송전, 지역 배전으로 분리하는 소위 번들분리(unbundle)가 이루어지면 발전에서는 경쟁이 충분히 도입될 수 있다.

기술변화뿐만 아니라 동일한 기술에서도 상황에 따라 자연독점이 되거나 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한다. 예컨대 광활한 지역에서의 철도산업은 여타의 대안적 교통수단들이 없다면 당연히 자연독점이 될 것이다. 그러나 동일한 구간에 대해 철도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항만, 공항, 운하 등이 병행적으로 존재한다면 철도산업은 독점의 시장지배력을 갖지 못한다. 비록 철도의 노선은 단 하나 존재하겠지만 여객과 화물의 교통을 담당하는 운송시장 전체는 경쟁시장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초과이윤이 사라지기 때문에 정부가 자연독점을 이유로 적자를 보전하며 개입할 이유는 없어진다.

Ⅰ 매물비용의 투자 위험

자연독점의 전통적 인식에 대한 또 다른 비판은 대규모 자본자산 시설에 대한 투자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한다는 지적이다. 자연독점 또는 유틸리티 산업에서는 대규모의 기반시설 투자가 필요한데, 이들 시설물은 다른 용도로의 전환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매물비용(sunk cost)의 위험이 매우 크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기업의 진입은 어려우며, 또 설령 있다 하더라도 기존 기업의 저항이 -약탈가격 등 반경쟁적 행동- 극렬하게 나타날 것이다. 결국 기반시설 산업에서 독점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이유는 ‘규모의 경제’보다는 대규모 투자가 갖는 매물비용의 위험 때문이다.

기반시설 자본자산을 언제든지 다른 용도로 전환할 수 있다면, 설령 ‘규모의 경제’가 있다 하더라도 잠재적 진입자들은 얼마든지 용이하게 등장할 수 있다. 예컨대, 고속도로를 철거하더라도 그 토지를 상가 지역으로 또 그 포장재를 건설자재로 얼마든지 전용할 수 있다면, 고속도로에 대한 잠재적 투자자들은 많이 등장할 수 있다. 이처럼 시설물 투자자 매물비용이 되지 않는다면 잠재적 진입자의

위협은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하여 시장지배력이 유지되기 어렵다. 잠재적 경쟁자들이 존재하는 이러한 경쟁시장(contestable market)에서는 초과이윤이 거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개입의 필요성도 사라질 것이다.

독점 유지의 중요한 근거가 ‘규모의 경제’가 아니라 매물비용에 있다는 사실은 민간기업들에서도 그 사례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예컨대, 어떤 자동차 제조사가 자신들의 자동차에만 특화된 어떤 부품을 사용하고, 또 이 부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입지, 특정한 기계, 특정한 인적자원 등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하자. 이 경우 자동차 제조사와 부품생산 하청기업은 서로 상대방의 기회주의적 행동의 위험에 노출된다. 자동차 제조사는 특정한 부품을 안정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지를 걱정하고, 하청기업 역시 자동차 제조사가 부품을 안정적으로 구매할 것인지를 걱정한다. 만약 상대방이 갑자기 거래를 취소한다면 자동차 제조사는 이 부품을 사용하는 공정라인에 대한 투자가, 부품 제조사는 이 부품을 생산하는 기계장치에 대한 투자가 매물비용으로 전락한다. 이러한 매물비용을 피하기 위하여 자동차 제조사와 하청업체는 일정한 가격과 물량을 ‘독점적’으로 보장하는 장기계약을 체결한다.

자연독점이 ‘규모의 경제’보다 매물비용의 위험에서 비롯한다는 이러한 지적은 자연스럽게 ‘거래비용 경제학’의 이론적 설명을 떠올리게 한다.¹⁾ 매물비용은 거래 상대방의 기회주의적 행동으로부터 나타나는데, 이는 거래비용의 중요한 원천 중 하나이다. ‘자산특정성(asset specificity)’은

범용적 용도가 아닌 특정한 용도로만 사용되는 자산을 일컫는데, 이러한 자산은 다른 용도로 전환하면 그 가치가 심각하게 하락하기 때문에 매물비용의 형태로 거래비용이 크게 발생한다. 그리고 이러한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거래 당사자들 사이에 장기계약과 같은 안전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Ⅰ 정부개입의 다양한 유형들

결국 전력, 통신, 수도, 도로 등 유틸리티 산업에서 독점을 허용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이유는 이들 산업에서는 기반시설에 대한 ‘대규모의 내구적이고 비유동적인 투자(expensive, durable, and immobile investments)’로 인한 매물비용이 있기 때문이다.²⁾ 이러한 기반시설은 특정한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유틸리티 서비스를 생산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그 이용자인 고객의 측면에서도 그 소비를 위해 ‘대규모의 내구적이고 비유동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 소비자들은 기반시설이 입지한 지역에 주택과 직장을 선택(또는 투자)하였기 때문에 기반시설 독점기업이 가격의 횡포를 부리더라도 다른 지역으로 쉽게 이사하기 어렵다. 따라서 수요자와 공급자들은 모두 ‘대규모의 내구적이고 비유동적인 투자’로 인해 상대방의 기회주의적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다.

자산특정성에서 비롯되는 이 기회주의적 위험으로부터 공급자와 수요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또는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안전장치는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장기계약이 기회주의를 방지하는 것처럼 유틸리티 서비스를 위한 기반

1) 거래비용 경제학의 내용에 대해서는 옥동석(2025), “시장실패의 교정수단들: 조직과 계약의 거버넌스,” 2025년 2월호, 『나라재정』, 한국재정정보원, pp.42~47 참조.

2) Gómez-Ibáñez, José A.(2003), *Regulating Infrastructure: Monopoly, Contracts, and Discretion*, Harvard University Press, 2003, p.3 참조. ‘거래비용과 정부개입 유형들’에 대한 논의는 이 책의 제1장과 제2장을 주로 참고하였다.

시설에서도 민간기업과 고객들 사이에 장기계약이 자발적으로 체결될 수 있다. 장기계약에서는 상대방의 기회주의적 행동들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약정하거나, 또는 거래 당사자들이 예기치 않은 변화에 대응하여 협력적으로 응변(應變)할 수 있도록 공동의 이익을 보장하는 -예컨대 제3의 중재자- 협력적 관계를 규정할 수 있다. 기반시설은 수십 년의 수명을 갖기 때문에 장기계약의 내용은 복잡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사전적 약정(commitment)'과 '협력적 응변(cooperative adaptation)'을 어떻게 조화할 것인가가 장기계약 체결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

유틸리티의 공급자와 이용자들이 서비스의 가격과 물량 그리고 위험분담 등에 대해 자발적으로 체결하는 장기계약은 법적으로 '민사계약(private contracts)'이 된다. 민사계약은 당사자들의 대등한 관계를 전제로 하며 일반적인 민법의 적용을 받는다. 물론 이러한 민사계약도 산업 전반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시장규제 또는 특정 산업에 대한 보편적인 산업규제를 받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민사계약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손해배상책임 등 일반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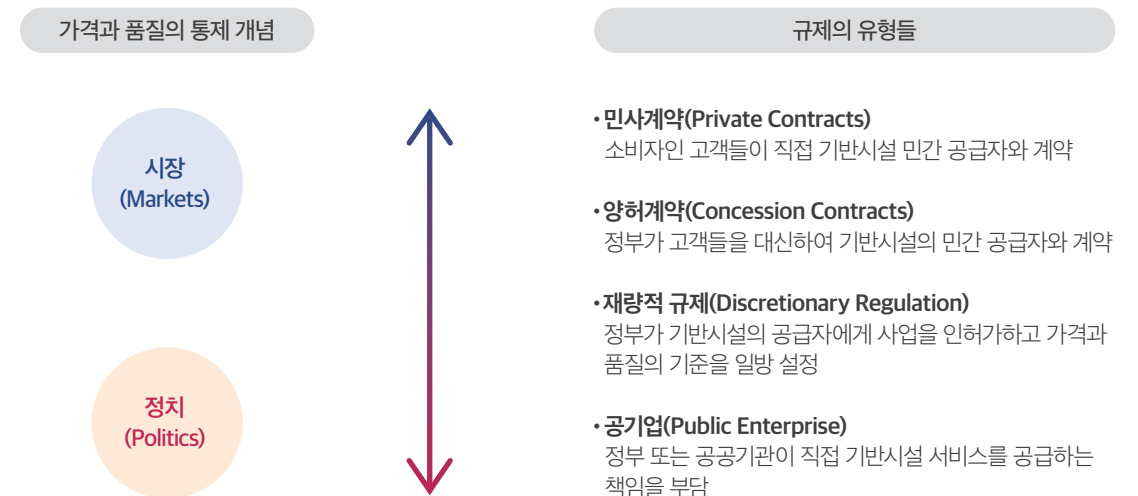
그런데 만약 민간부문에서 자발적인 민사계약이 원활하게 체결되지 못한다면 정부가 개입할 수 있다. 여기서는 정부가 그 수요자인 고객을 대리하는데, 고객들이 공급자인 기업과 자율적으로 체결하였더라면 나타났었을 '장기계약'을 염두에 둔다. 이를 '양허계약(Concession Contracts)'이라 하는데, 기반시설 서비스를 10~20년 장기간 제공하도록 정부가 민간기업에 인허가 사업권을 계약의 형태로 부여하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체결되는 '실시협약'이 여기에 해당한다. 양허계약은 법적

으로 '행정계약' 또는 '공법상의 계약'으로 간주되는데, 이는 정부가 사업자와 대등한 관계에서 체결되는 민사계약과 달리 정부의 우월적 지위를 원칙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양허계약은 통상 경쟁입찰을 통해, 특정 수준의 서비스에 대해 가장 낮은 사용료와 정부지원을 제시하는 입찰자에게 부여한다. 정부는 양허계약자가 계약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그 성과를 점검하지만, 계약이 부여된 이후에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그 계약을 변경할 수 없다. 만약 정부가 민간기업에 대해 임기응변적인 기회주의적 행동을 취한다면 시설물을 개선하거나 확대하는 민간투자를 추가로 유인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양허계약은 통상 민사법원이 아닌 행정법원을 통해 분쟁이 해결되기에 정부의 응변적 대응을 민사계약보다 더 넓게 인정하고 있다.

'재량적 규제(discretionary regulation)'에서는 정부의 재량적 대응 범위를 양허계약보다 더 넓게 인정하고 있다. 법령에 사업의 주요 사항을 규정하고 민간기업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사업 인허가증을 발급하는데, 정부는 기반시설의 요금과 서비스 기준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권한을 보유한다. 양허계약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기술되는 것과 달리 재량적 규제에서는 원칙과 지침들이 일반적인 용어로 설명되어, 정부는 새로운 또는 예측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 상당한 재량과 융통성을 가진다. 정부는 민간기업이 법적 요구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 또는 여타의 심판기관에 제소할 수 있다. 그러나 민간기업이 투자재원을 민간의 자본시장에 의존하기 때문에 시장의 영향력이 일정한 정도 존재하는데, 만약 정부의 결정이 가혹하다면 기업은 노후시설을 대체하거나 수요증가를 수용하기 위한 자본을 조달할 수 없을 것이다.

| 그림 2 | 유틸리티 산업에 대한 정부규제의 유형들



자료: Gómez-Ibáñez, José A.(2003), *Regulating Infrastructure: Monopoly, Contracts, and Discretion*, Harvard University Press, 2003, p.33.

| 자연독점에 대한 궁극적 지향

<그림 2>는 지금까지 설명한 민사계약, 양허계약 (또는 행정계약), 재량적 규제 그리고 공기업을 스펙트럼 형태로 열거하고 있다. 이들 유형은 엄격한 '사전적 약정'과 유연한 '협력적 응변'이 조화하는 정도를 반영하여 정렬되어 있다. '사전적 약정'은 시장 메커니즘으로 각종 역할과 책임의 분담이 명확하게 규정된다. 반면 '협력적 응변'은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대응하는 것으로서 정치적 메커니즘이 된다. 여기서 공기업은 정부가 해당 기업을 직접 소유 경영하기 때문에 정치의 영역이 가장 많이 작용할 것이다.

자연독점을 '규모의 경제'라는 기술적 측면이 아니라 기회주의적 행동에 대한 위험회피로 파악하는 시각은 매우 의미심장한 정책적 시사를 제공한다. 법적, 사회적, 정치적 제도가 발전함에 따라 정부 규제의 방식도 공기업, 재량적 규제, 양허계약, 민사계약의 순서로 진화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1990년대 후반에 도입

되었던 한국의 사회기반시설 민자유치제도는 재량적 규제에서 양허계약으로 진화 발전하였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만약 '사전적 약정'의 계약 역량이 낮을 때에는 재량적 규제에서 양허 계약으로 전환하는 것이 매우 위험할 것이다.

자연독점 해결의 궁극적인 지향은 민사계약이 되어야 한다. 고객들이 정부의 개입 없이 자율적으로 사업자와 직접 협상하기에 개별 상황에 가장 적합한 계약이 체결될 수 있고 또 그에 따라 원가절감, 품질개선을 위한 기술발전의 유인도 가장 크기 때문이다. 만약 기반시설 서비스가 민사계약에 의해 충분하게 제공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회 내에서 기업가적 정신과 역량의 부족, 그리고 사회적인 계약 역량의 -또는 집단적 거버넌스 역량의- 부족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금융시장에서 사업권을 기반으로 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지적은 더욱더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해상풍력 프로젝트 금융조달 환경과 녹색금융의 필요성

최덕환 한국풍력산업협회 실장

인류가 가장 바람이 많이 부는 바다 한가운데 거대한 구조물을 수십 기 세우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해상풍력은 재생에너지 중 가장 많은 청정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녔지만, 사업 불확실성이 크다. 이 같은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금융의 역할은 지대하다.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초기 막대한 자본을 투입해 수십 년 동안 자본을 회수하는 형태를 지녔다. 통상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한다. 기존 화석연료 및 원자력 발전사업은 시공사가 복잡한 장비 일체를 조달하고, 건설하며, 유지보수 하는 등 전 과정을 모두 도맡는 턴키(Turn-key) 방식이 주류를 이룬다. 반면, 상대적으로 덜 복잡한 육·해상풍력 발전시설을 건설·운영하는 대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기업이 설비 및 서비스사와 개별 계약(multi contract)을 맺고 포트폴리오를 꾸민다. 분야별 포트폴리오 관리를 통해 비용을 낮추고 책임을 분산하는 구조를 만든다.

PF는 이 같은 대형 재생에너지 사업에 적합한 자금 조달 방식이다. PF는 대개 개발 주체인 원청(Sponsor)과 통상 금융권으로 구성된 대주(Lender)

등 주요 주체가 각기 투자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SPC가 주체가 돼 사업을 수행하고, 지분대로 수익을 배분한다. PF는 원청의 신용과 담보를 중시하는 기존 기업 금융조달(CF, Corporation Financing) 방식과 달리 프로젝트의 미래 사업성을 판단해 금융권이 투자자로 참여하며, SPC가 아닌 원청이나 지분 참여 주체에게 사업 관련 재정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소구권 제한(Non/Limited Recourse)을 특징으로 한다.

소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금융권은 CF보다 상대적으로 더 철저하게 사업관리를 SPC에 주문한다. SPC에는 원청과 대주 외에도 EPC(설계·조달·건설)와 O&M(유지보수)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전력 구매자(Off-taker) 등이 참여한다. 별도로 화석연료는 PF를 위해 SPC를 구성할 경우, 재생에너지와 달리 연료 공급(Fuel Supply)사가 꼭 참여해야 한다.

개발 단계에서만 설비용량 MW당 약 50~60억 원, 최근에는 90억 원 수준까지 비용을 투입하는 해상풍력 사업은 원청의 신용과 담보를 중시하는 CF 방식만으로는 막대한 자본을 조달하는 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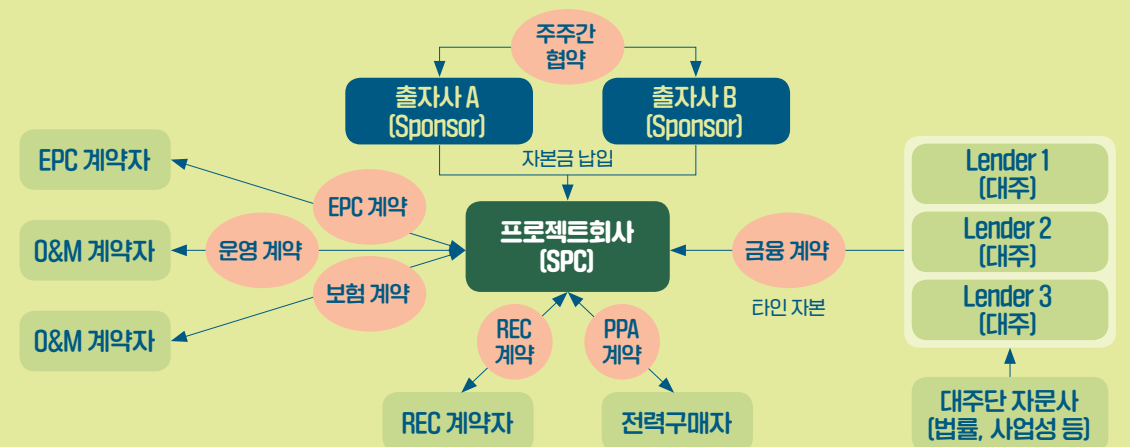
PF와 CF 특징 비교

구분	Project Financing	Corporate Financing
차주사	신설 프로젝트 회사 (SPC)	기존 기업
사업성 분석대상	프로젝트 자체 현금흐름 및 보유자산	전반적인 기업 신용도 및 보유자산
대출금 상환재원	프로젝트 수입 (Cashflow)	기업 상환능력
소구권	Limited or non-recourse	Full-recourse
채권보전 방안	프로젝트 자산 프로젝트 참여자 직간접 보장 등 지원 주요 계약상 권리 양도담보	기업 전체 자산에 대한 물적 담보 모기업 또는 관계회사 연대보증 등
차입비용	프로젝트 사업성 및 만기(일반적으로 장기) 영향 거래비용 발생하나 장기 프로젝트로 영향 미미	기업 신용도 및 담보가치 반영
대출 기간	프로젝트 사업특성에 따라 결정 (일반적으로 10년~20년 이상 장기)	대출 용도에 따라 결정 (운영자금대출 3년 이내, 시설자금대출 5년~7년)

한계가 있다. PF 방식은 향후 대형 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이 확대될수록 더 활성화될 전망이다. 개발-건설-운영 단계로 이뤄진 발전사업에서 PF를 통한 자본 조달 조건은 건설 전에 모두 구비돼야 한다. 원청과 대주, EPC, O&M, 전력 구매자 등 주요 주체가 모두 SPC에 참여하고 있어야 한다. SPC와 주요 주체 간 각종 계약도 모두 끝나야 한다. 이 과정에서 SPC는 설계·조달·건설은 전문성을 지닌 EPC사에, 유지보수는 O&M사에 수수료(fee)를 주는 대신 관련 책임을 지게 하는 계약을 맺는다. 이를 통해 주요 참여 주체에게

사업 리스크를 분산한다. 가장 중요한 사항은 SPC가 전력 구매자와 계약을 맺고 안정적으로 전력을 판매할 수 있어야 한다. 매출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풍력시스템사(터빈 공급업체)와 기기 공급 및 고장 시 발생할 수리 및 책임 조건 등을 협상해야 하고, 설비 주요 구성품을 공급하는 개별 업체와도 차질 없는 공급과 품질을 약속받아야 한다. 더하여 보험이나 선박, 항만 이용 등 모든 조건을 조정해 차질 없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계약을 토대로 모든 조건을 완비해야 비로소 대주들과 자금

해상풍력 SPC 구조와 계약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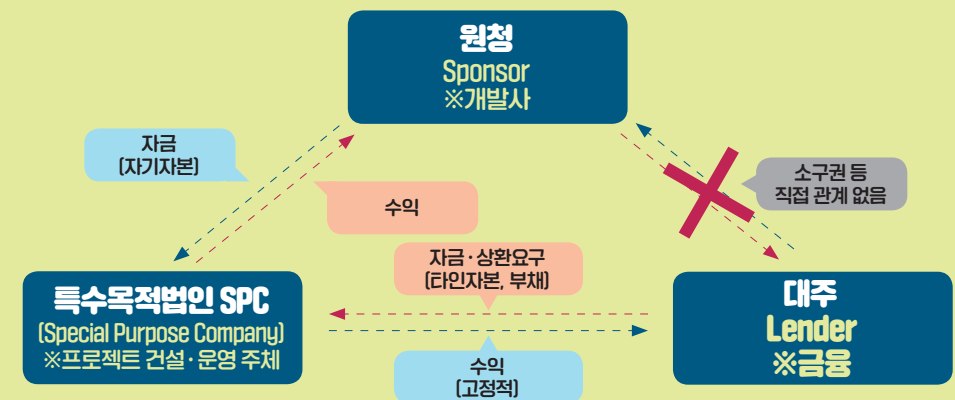
조달을 위한 협의를 시작할 수 있다. 개발 단계는 통상 원청이 SPC에 자기자본을 투입하는 시기다. 민원과 다수 인허가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아 건설과 운영 단계와 비교할 때 가장 리스크가 크다. 이 과정에서 사업 자체가 좌초되는 경우도 다반사다. 이 개발 기간에 SPC가 금융권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쉽지 않다. 이 기간 동안 원청은 많은 자금을 SPC에 투입해 민원과 인허가를 해소하는 데 집중한다. 국내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경우 사례마다 천차만별이나 초기 개발 단계에만 천억 원대 이상 자금을 소모한 기업도 있다. 개발 단계에서 건설단계로 넘어가면 여전히 고위험이 존재하나 대주에게 자금을 차입해 타인자본을 레버리지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해상풍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초기 단계부터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자금력이 필요한 뜻이다. CORIO, CIP, Orsted, Equinor, Credo Holdings 등 세계 해상풍력 시장에서 활약하는 기업들은 주로 막대한 초기 투자를 감당할 수 있고 오랜 기간 운영을 통해 투자와 수익을 회수해도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오일&가스 또는 펀딩 계열 금융사 같은 기업이 건설 및 운영에 경험과 실적을 가진 엔지니어링사를 인수하거나 관련 인원을 고용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다수다. 반면 기술과 경험, 투자 경험이 부족한 기업이나 금융권은 해상풍력 사업에 진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한국은 해상풍력 후발주자로 국내 기업이나 금융이 아직 충분한 실적을 쌓지 못해 많은 자본을 투자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이 같은 애로를 해결할 방법의 하나로 녹색 금융이나 유사 정책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재생에너지 투자에서 녹색 금융기관의 역할은 사업자가 국가 또는 민간 금융기관에서 원활하게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다. 가령 미국은 LPO(Loan Program Office)에서

‘Title 17 청정에너지 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온실가스나 대기오염 물질 감축을 위한 청정에너지 보급과 에너지 인프라 재투자를 활성화하고 있다. 사업자가 재무부 산하 연방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해 LPO의 승인을 받게 되면 미국 에너지 기구(DOE)의 보증을 받는다. LPO가 연방은행과 모든 조율을 담당하며 사업자는 추가 조치 없이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 지원과 보증을 약속받는다. 사업자는 민간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할 시 LPO로부터 최대 90%까지 보증을 제공받을 수 있다. 다만 LPO는 프로젝트 현금흐름과 신용위험을 고려해 대개 50~70% 사이에서 보증을 제공한다. 미국은 이밖에 2009년 오바마 행정부가 미국 청정에너지보안법(ACE Act)을 제정하며, 녹색은행 설립을 지원하는 비영리단체인 녹색자본연합(CGC)을 신설했다. 미국은 연방 차원보다는 주 정부 차원에서 이 같은 녹색 은행을 주로 설립하는데 2023년 기준 워싱턴, 뉴욕, 코네티컷, 앨라바마, 20개 이상 주에서 녹색 은행을 세웠다. 호주의 경우 2012년부터 관련 법에 따라 CEFC(The Clean Energy Finance Corporation)를 설립하고 청정에너지 기술 개발과 상용화에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투자 지원을 하고 있다. 초기에 100억 호주 달러로 시작했으나 2022년과 2023년에 투자금을 크게 높여 305억 호주 달러 이상 가용 자본을 확보했다. CEFC는 국가 전력망 재구축 펀드, 개별 가구 에너지 업그레이드 펀드, 호주 기술 강화 펀드, 수소 펀드 등 재생에너지 확대와 이산화탄소 포집, 수소 그리고 전력망 보강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풍력의 경우 골든플레인스 풍력단지 1단계와 2단계에 각각 1억 7,500만 호주 달러, 1억 2,750만 호주 달러를 투자했다. 영국은 2008년 기후변화법을 제정하고 2012년 에너지기후변화부(DECC) 산하에 녹색 투자은행

(GIB, Green Investment Bank)을 설립해 2016년까지 친환경 프로젝트에 85억 파운드를 지원했다. 전체 투자금의 70% 이상을 해상풍력 사업에 할당했는데, 단계별로 네 가지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투자를 지원했다. 그 네 가지 환경이란 ▶(기술 리스크) 시장에 새로운 풍력터빈 기술을 도입할 경우 ▶(규제 리스크) 전력시장 제도 변화로 일관성 있는 해상풍력 지원 정책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 경우 ▶(미성숙한 시장) 2012년 불확실한 해상풍력 시장 전망에 따른 민간의 장기 투자계획이 부재한 경우 ▶(금융기관의 전문성 부재) 2012년 당시 장기간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해야 하는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대해 위험과 수익을 평가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전문성이 부재한 경우 등이다. GIB는 이 같이 시장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했으며, 영국 해상풍력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2017년 25억 파운드에 맥쿼리 그룹에 매각됐다. 이밖에 캐나다 인프라은행(CIB)은 2017년 설립해 2024년까지 총 70개 프로젝트에 130억 캐나다 달러를 투자하는 등 국가마다 초기 해상풍력 시장을 활성화하는데 녹색금융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한국 역시 금융위원회가 2024년 3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우선 지원과 민관 공동 참여 기반 조성을 위해 2030년까지 ▶저탄소 공정전환 등을 위한 정책 금융기관 역할 강화 ▶청정에너지 수용에 대응하여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기후기술 육성을 통한 미래 먹거리 개발 ▶민간의 기후금융 지원을 위한 제도 정비 등 네 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특히 정부는 작년 시중 6대 은행과 미래에너지 펀드를 조성해 9조 원 규모의 5단계 펀드를 출시했다. 1단계는 약 1조 2,600억 원 규모로 산업은행이 20%(2,520억 원), KB자산(국민은행), NH아문디(농협은행), 신한자산(신한은행), 우리자산(우리은행), 하나대체(하나은행) 등 5대 금융기관이 각각 16%(2,016억 원)씩 출자했다. 이를 통해 해상풍력 등 초기 대규모 재생에너지 시장을 만드는 데 필요한 금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비록 대형 해상풍력 프로젝트 하나당 조 단위 투자가 이뤄지는 만큼 투자 규모 측면에서 갈 길이 멀다는 업계 평가가 뒤따르지만, 그동안 열악한 국내 재생에너지 투자 환경을 생각하면 분명한 청신호다. 초기 대규모 재생에너지 시장 조성과 탄소중립 사회 기반 마련을 위해 정부와 금융이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다해줄 것을 소망한다.

Project Finance의 구조



베를린

역사의 수도에서 유럽에서 가장 활발하고
스마트한 도시가 되기까지

글·한지혜 서울연구원 미래공간연구실 연구위원



15세기 브란덴부르크 제국의 수도, 18세기 초 프로이센 왕국의 수도, 19세기 후반 비스마르크 제2 독일제국의 수도 등 베를린은 수도로서 오랜 기간 기능하며 성장하였다. 2차 세계대전으로 도시가 폐허가 되고 서베를린과 동베를린으로 분할되면서 도시 성장이 잠시 주춤하기도 하였으나, 독일 통일 이후 수도 기능을 회복하고 스타트업 육성정책 중심의 산업고도화 전략과 지역 개발과 결부된 스마트시티 전략을 추진하며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였다. 그 결과 베를린은 현재 유럽과 세계의 경제 중심지이자 가장 스마트한 도시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BERLIN



스타트업 생태계를 육성하며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독일 통일 이후 동베를린 경제를 이끌던 제조업체가 파산하고 대량 실업 사태가 발생하면서 베를린의 지역경제는 위기에 직면하였다. 2000년대 초반에는 실업률이 20%대에 달하기도 하였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베를린 주와 독일 연방정부는 동 베를린의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를 서비스업 중심

산업구조로 전환하는 데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무엇보다 베를린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이 될 신성장 산업과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 하는 것에 주력했다.¹⁾

기업가 정신을 함양하고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인 ‘그룬더차이트(Gründerzeit)’를 도입하여 대출, 보조금 및 투자 등의 자금지원, 자금조달 방법이나 해외 진출 방법을 알려주는 멘토링 지원 등 초기

단계 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다양한 자원을 제공하였다. 또한 스타트업을 위한 세제 혜택과 보조금을 마련하여 투자처로서 베를린의 매력도를 향상하였다.

베를린 주와 독일 연방정부의 지원은 이와 같은 재정적 인센티브의 제공에만 그치지 않았다. 창업에 필요한 인프라와 협업 공간의 중요성도 간과하지 않고 아들러스호프 과학 도시(Adlershof of Science City)와 샤를로텐부르크 혁신 센터

(Charlottenburg Innovation Centre) 등 베를린에 여러 혁신 허브와 기술 단지를 조성하였다. 스타트업이 아이디어 교류, 네트워킹 기회, 최첨단 기술 활용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이들 혁신공간에는 최첨단 시설이 배치되었으며 연구기관과의 연계, 다양한 기업가들로 구성된 커뮤니티 활동 등이 가능한 환경이 마련되었다.²⁾

1) 임예은(2024), “독일 베를린 지역산업 육성과 시사점”, 『KDB Report』, KDB산업은행.

2) ozinoski(2024), “How does the startup landscape look like in Berlin?”, Article, HABYT.



스타트업과 함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도시 지속성장 도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마련되면서 베를린에는 기업이 모여들었고 자연스럽게 자금도 따라왔다. 이로 인해 도시가 급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도시의 성장은 경제 중심지로서 일정 수준의 위상 확보란 긍정적 성과를 창출했지만, 동시에 빠른 인구 증가에 따른 주택 수요 급증, 도시 인프라 및 교통 문제, 환경 문제 등의 부작용을 유발하기도 했다. 이때 베를린은 ICT 기술을 활용해 경제 중심지로서 베를린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각종 도시화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의 지속성장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다. 스마트시티(Smart City) 도시 모델을 도입한 것이다.³⁾

2010년대 초반 독일 연방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프라운호퍼(Fraunhofer Gesellschaft)는 미래도시(Morgenstadt) 프로젝트에서 베를린을 포함한 독일의 중요 해결과제로 이산화탄소 중립, 에너지 효율성, 기후 보호 등을 선정하고 스마트시티를 통한 문제 해결의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했다. 이후 독일은 정부부처, 지자체, 학계, 기업, 시민으로 구성된 국가 도시 개발 정책 플랫폼(NPZ, Nationale Plattform Zukunftsstadt)을 조직하고 독일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기술 산업 의제를 모색했다.⁴⁾ 이 시기 베를린은 주정부-기업(스타트업)-연구 기관으로 구성된 스마트시티 네트워크(Netzwerk Smart City Berlin)를 형성해 독일 연방정부의 스마트시티 논의를 따르면서도 베를린 주가 당시 직면하고 있었던 주요 정책과제—도시 성장 동력 지속 확보와 도시화 문제 해결—에 적합한 스마트 시티 전략(Smart City Strategis Berlin)을 마련했다.

3) 전자신문(2018.09.19.), "[36주년 창간기획] 베를린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도시 문제 해결하고, 삶의 질 높여".

4) 화임(2019), "베를린의 스마트시티 추진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열린정신 인문학 연구』, 원광대학교 인문학연구소.



때문에, 베를린 스마트시티 전략은 오픈 데이터 구축, 디지털화를 통한 교통, 에너지, 주거 분야 변화 유도,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 마련 등의 일반적 스마트시티 정책도 포함하지만, 스타트업과의 협업을 통해 스마트시티를 실현하고 도시를 재생하는 것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다.⁵⁾ 실제로 베를린은 스마트시티 모델을 통해 도시 내에 이미 형성돼 있던 기술-기업-연구기관 간의 교류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 기업 입지로서 베를린의 매력도를 한층 제고하는 한편, 일과 연구뿐 아니라 교육, 거주 등을 위한 주거 공간도 마련함으로써 도시화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이에 2015년 스마트시티 전략 선언 시 도시 내 10여 곳을 미래

장소(Zukunftsorte)로 지정하고 지금까지 해당 지역들을 혁신지구 및 스마트시티로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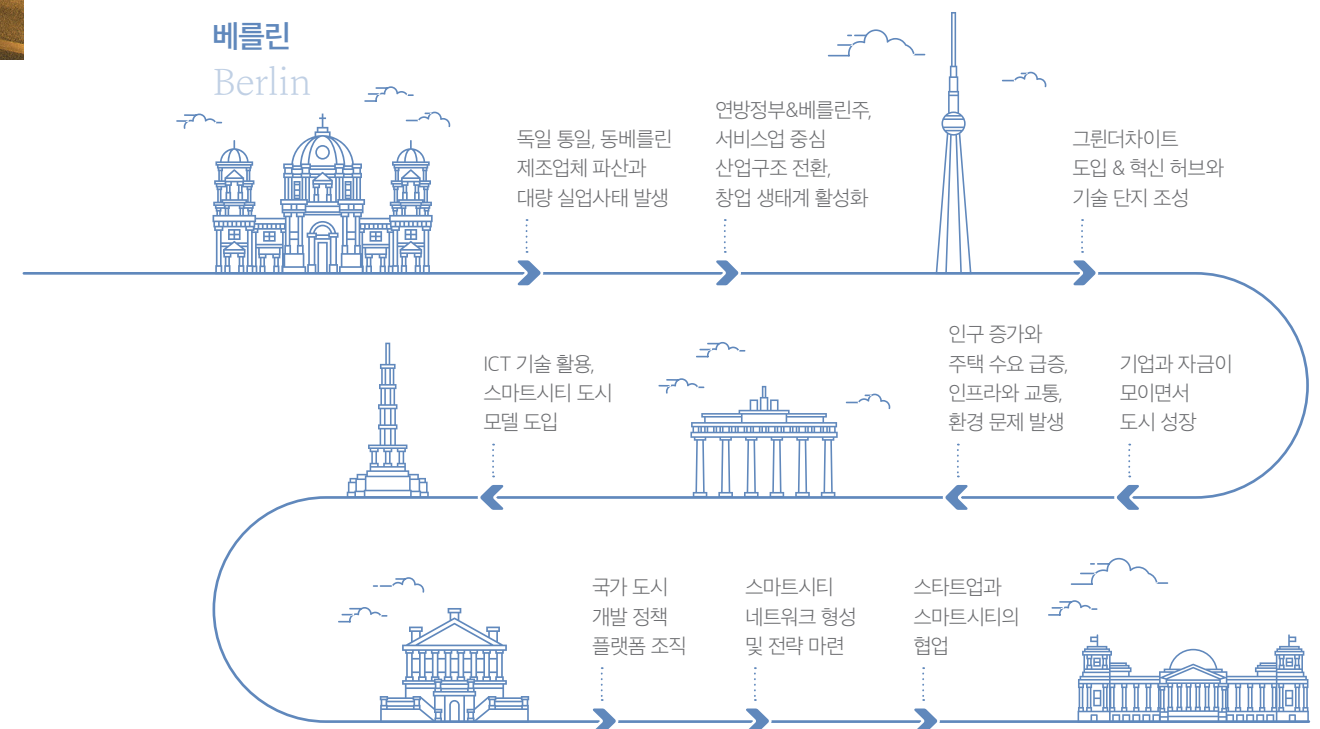
대표적인 미래장소로 아들러스호프와 오이레프 캠퍼스(Euref Campus)가 있다. 아들러스호프는 독일 통일 이후 1990년대 초반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상대적으로 낙후됐던 동베를린을 재건하기 위해 과학도시로 조성되었던 곳으로, 미래 장소로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R&D와 창업뿐 아니라 제조기반산업과 어린이집, 학교 등 주요 기반시설이 갖춰진 주거지구가 함께 공존하는 혼합형 클러스터로 재조성되고 있다. 이 과정에

일본의 파나소닉 등 다양한 기업들이 참여해 태양광발전시스템을 활용한 전기 및 난방 공급, 인공지능 및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스마트홈 서비스 제공 등 신기술을 적용한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주거 환경을 마련하고 있다.⁶⁾

오이레프 캠퍼스는 오래된 가스 저장 탱크와 주변 지역을 오이레프 아게(Euref AG)가 인수하여 냉난방 에너지를 자체 생산하고 전기자동차, 자율주행차 실험이 이루어지는 재생에너지 전환 및 혁신 모빌리티 생활 실험지구로 재탄생시킨 곳이다. 현재 오이레프 캠퍼스는 에너지 및 모빌리티 관련 연구기관,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이 여럿 입주해 있으며 수많은 공동연구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등 다양한 기업 활동, 연구, 그리고 창업이 이루어지는 복합 업무지구 또는 혁신지구로 기능하고 있다.⁷⁾

정체된 도시의 새로운 성장 동력,
스타트업·스마트시티·에너지·첨단기술

이처럼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 그리고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의 추진을 통해 도시 성장의 동력을 계속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성장 방안을 모색한 결과, 베를린은 독일 통일 이후 맞이한 경제적 위기를 이겨내고 지금은 런던, 파리 등과 함께 유럽 내에서 스타트업 생태계가 가장 활발한 도시이자 가장 스마트한 도시가 되었다. 그리고 여전히 베를린은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스타트업 생태계, 친환경 에너지, 첨단 기술 등을 동력 삼아 도시의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베를린의 끊임없는 미래 성장 동력 모색 노력은 성장이 정체된 국내 주요 도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5) 신희완(2018), “신성장 동력 창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진행(독일 베를린市)”, 『세계도시정책동향』 제433호, 서울연구원.

6) Panasonic Group(2020.07.02.), "Berlin's First Smart City Quarter Powered by Panasonic"

7) Euref AG 홈페이지(<https://euref.de/en/welcome/>)

서울 남산공원의 여섯 위인

7월호

백범 김구

(1876.8.29.~1949.6.26.)

- 임시정부 주석(1926~1945)
- 한민애국단 조직(1931)
- 한국광복군 창설(1940)
- 백범일지(1929, 1942)

8월호

도마 안중근

(1879.9.2.~1910.3.26.)

- 대한의군 참모총장 (1907~1909)
- 항일 비밀결사 단지회 조직 (1909)
- 이토 히로부미 저격(1909)

9월호

성재 이시영

(1869.12.3.~1953.4.17.)

- 대한민국 초대 부통령 (1948~1951)
-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참여 (1919)

10월호

다산 정약용

(1762.6.16.~1836.2.22.)

- 조선 후기 실학자
- 「경서유표」, 「흙흙신서」, 「목민심서」 저술

11월호

퇴계 이황

(1502.1.13.~1571.1.13.)

- 조선시대 성리학 발전 및 심성론 연구
- 향약 제정 및 서원 설립
- 도산서당 운영, 후진 양성
- 도산서원(사후 4년후) 설립

12월호

김유신 장군

(595.?~673.7.1)

- 신라의 삼국통일(668) 주역
- 황산벌 전투 승리(660년)

지난 6일은 현충일로 민족과 국가의 수호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의 명복을 빌고 업적을 기리는 날이다. 나라를 위해 일하신 수 많은 분들은 그렇게 멀리 있는 것은 아니다. 가깝게는 여러분의 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일 수도 있다. 꼭 위인전으로 나올법한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많다. 지역마다 호국 위인을 기리는 장소와 기념사업회가 많은 이유이다. 여러분 주위를 잠시만 둘러보면 찾아가 볼 수 있는 곳이 많으니 방문해 보시길 추천한다. 한국재정정보원의 주변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 근처에 있는 서울 남산 공원에는 우리나라를 지키고 빛낸 여섯 위인을 기린 상이 많다. 백범 김구, 도마 안중근, 성재 이시영, 다산 정약용, 퇴계 이황, 김유신 장군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독립을 위해, 나라의 학문을 드높이기 위해 헌신하였다는 것이다.

현충일 추념사를 통해 대통령께서 언급하였듯이, 우리가 이들을 기리는 이유는 기억하고 기록함으로써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다. 이에 나라재정에서는 7월호부터 12월호까지 서울 남산공원에 있는 여섯 위인의 동상을 소개하고, 일생에 나라를 위한 주요 업적을 조망하고자 한다.



① 백범 김구 像



② 도마 안중근 像



③ 성재 이시영 像



④ 다산 정약용 像



⑤ 퇴계 이황 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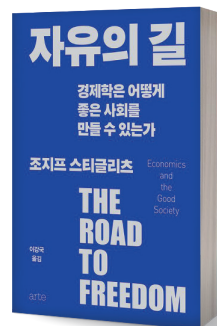


⑥ 김유신 장군 像

서울 남산 백범광장에서는 김유신 장군상, 이시영 선생상, 백범 김구 선생상 순으로 관람할 수 있고, 바로 옆 서울특별시교육청 남산도서관에서는 안중근 의사상, 퇴계 이황 선생상, 다산 정약용 선생상을 만날 수 있다. 지하철로는 서울역(10번 또는 8번 출구)과 회현역(4번 출구)을 통해, 버스로는 402번 405번 버스로 방문할 수 있다.



반복되는 역사 속에서 볼 수 있는 것



「자유의 길」

조지프 E. 스티글리츠 지음 | 아르테

이 책은?

노벨상 수상 경제학자가 말하는
경제학은 좋은 사회를 만드는 방법

노벨상 경제학상을 받은 세계적인 석학 조지프 E. 스티글리츠는 '자유'라는 가치가 인권과 평등의 문제를 넘어 우파에 의해 왜곡되어 신자유주의와 시장 근본주의 폭거의 논리로 사용되었음을 말한다. 결국 소수 특권층의 자유만 비대해지고 사회 전체는 경제적 불평등과 불안정이 심화되었음을 지적하는 저자는 경제정책 결정의 일선에서 활동해 오면서 모두가 함께 번영할 수 있는 사회 개혁의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책은 경제학은 어떻게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는가란 근본적 질문을 던지면서 모두를 위한 새로운 자유의 길을 발견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

이 책의 핵심 보감 寶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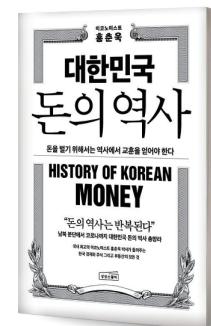
스티글리츠가 말하는 자유와 경제학

- 자유의 의미에 관한 현재 보수파의 해석은 피상적이고 오도되어 있으며 이데올로기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 현재 이야기되는 자유라는 말은 어떤 경제·정치·사회 체제가 사회의 행복을 가장 잘 향상시키는 지, 어떤 체제가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자유와 행복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해 건전하게 추론하는 우리의 능력을 제약한다.
- 자본주의 체제에서 어떤 형태로든 사기가 착취가 일어나지 않는 곳은 찾아보기 어렵다.
- 신자유주의는 외부효과(externality)의 중요성을 간과했지만 기후변화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외 부효과가 최우선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정부는 거시경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 만큼이나 사회가 환경과 공중보건을 유지하도록 돕는 데도 필요하다.

언제나 역사는 반복된다.

사상과 철학, 유행까지 인간의 손에서 벗어난 흐름을 타고

반복하는 역사를 들여다보면 당장 내일 일은 몰라도 내일을 맞이할 준비는 할 수 있다.



「대한민국 돈의 역사」

홍춘욱 지음 | 상상스퀘어

이 책은?

남북 분단에서 코로나까지
한국 근현대사를 관통하는 대한민국 돈의 역사

100년도 안되는 짧은 시간 동안 대한민국을 뒤흔든 여러 가지 사건들의 우리 경제의 흐름을 바꾸어 왔다. 저자는 우리 경제와 주식,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바꾼 큰 사건들을 구체적인 통계 자료 등 탄탄한 논리와 풍부한 근거를 바탕으로 제시하면서 반복되는 역사 속에서 과거를 기억하고 교훈을 얻는 깊이 있는 돈 공부가 필요함을 역설한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닌, 실수를 반복하지 않음으로써 자본주의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다.

이 책의 핵심 보감 寶鑑

한국 경제의 흐름을 바꾼 19대 사건

1. 1945년 남북 분단
잘 사는 나라를 만들고 싶다면? 제도를 잘 만들어야!
2. 1949년 농지 개혁
자영농을 육성한 나라는 잘못되기 어렵다
3. 1954년 적산 매각
대한민국 재벌의 기원은 이때부터!
4. 1961년 환율 인상
수출 주도 성장의 궤도에 올라서다
5. 1962년 화폐 개혁
없는 살림 쥐어짜 봐야
6. 1964년 베트남 파병
돈벼락을 맞다
7. 1965년 한일 기본 조약 체결
자존심을 내주고 실리를 취하다
8. 1972년 '8.3조치'
부채 주도 성장의 단맛에 빠지다
9. 1980년 2차 석유 위기
한국 전쟁 이후 첫 번째 마이너스 성장의 해
10. 1984년 3저 호황
한국을 찾아온 두 번째 돈벼락
11. 1989년 3고 불황
경쟁력은 어떻게 무너지는가?
12. 1996년 반도체 위기
7개월 만에 반도체 수출 반토막!
13. 1997년 외환 위기
체력도 약했고 운도 없었다!
14. 1999년 대우 그룹 사태
부채 주도 성장의 종장
15. 2002년 카드 대란
내수 주도 성장의 꿈이 무너지다
16. 2003년 중국 붐
고객에서 경쟁자로
17.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위기는 기회!
18. 2010년 이후의 저물가 현상
FTA와 생산성 혁신 그리고 글로벌 경기 침체
19. 2011년 저축 은행 사태
규제 완화 이후에는 위기가 찾아온다!

dBrain+ 국제협력



한국재정정보원은 한국재정정보법에 근거해 dBrain+의 수출을 목표로 한 재정정보화 분야의 국제협력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 한국재정정보법 제5조(사업)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수출 등 재정정보화 분야의 국제협력
- 국제금융기구 등과 dBrain+ 시스템 홍보, 협약체결 등을 통한 국제협력 기반 확보와 사업발굴, 기술협력 등 공동 협력 활동 전개
- 개발도상국과 재정정보화에 직·간접적 참여를 통하여 선진 재정전문기관 위상 구축

한국재정정보원은 재정정보시스템 수출 단계에 맞추어 dBrain+ 국제협력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정정보시스템 수출 단계

01
STEP

제도 및 업무프로세스 혁신

재정시스템 개선 및
업무 프로세스 표준화컨설팅

02
STEP

정보화전략수립

재정정보시스템 구축
기본 계획 수립 컨설팅

03
STEP

시스템 구축

구축 재정정보시스템 구축/지원

04
STEP

제도 및 업무프로세스 혁신

운영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 지원

한국재정정보원은 재정정보화 분야 재정협력 네트워크 구축, 개도국 재정공무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기획 및 실시, dBrain+ 홍보 및 재정정보화 사업발굴 활동 수행, 국제금융기구와 공동협력 활동을 통해 dBrain+ 시스템 국제협력 추진, ODA 사업(KSP 등) 컨설팅 및 프로젝트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재정시스템 구축·운영 경험을 전수함으로써 국제사회 재정정보화에 기여합니다.

- 역량강화 프로그램, 세미나, 컨퍼런스 등을 통한 경험전수 및 지식자산을 공유합니다.
- 재정시스템 구축·운영의 전 과정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국제사회 재정정보화에 기여합니다.
- 개도국 재정정보화를 위해 국제개발금융기구와 협력합니다.

Phase 1 지식자산 공유

역량강화 프로그램(CBP) 세미나,
컨퍼런스 등의 협력을 통해 경험과 지식을 공유

지식자산 공유

경험전수

초청연수

입문

기본

심화

재정시스템
(dBrain+,
e나라도움)
구축 경험 소개

실사례 중심의
시스템
실습교육 실시

수요국
맞춤형
컨설팅

Phase 2 재정정보화 참여

전문가 조직을 구성하여
컨설팅, 구축, 운영의 전 과정에 참여

컨설팅
프로그램

시스템 구축 및
운영지원

• 사전타당성 사업
정보화전략 사업(ISP)
(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 경험공유 사업(KSP)
(Knowledge Sharing Program)

• 품질관리
• 운영관리
• 변화관리

국내외 국제협력 채널 협업
(WB, IDB, ADB, KDI, 한국수출입은행 등)



FIS NEWS



한국재정정보원, 부산·대구 지역 사용자 간담회 개최

- 한국재정정보원장, 직접 참석해 현장 목소리 경청 -

한국재정정보원(원장 윤석호)은 5월 29일(목)과 30일(금), 각각 부산과 대구 재정도움센터에서 e나라도움 사용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민간기관 등 다양한 유형의 e나라도움 사용자들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시스템 사용에 대한 생생한 현장 경험과 의견을 공유했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 직접 참석해 사용자들과 적극적인 소통에 나선 윤석호 원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시스템에 반영하는 것이 사용자의 신뢰를 높이는 출발점”이라며, “AI를 접목하여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하는 등 사용자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재정정보원은 현장에서 수렴한 의견을 시스템 개선에 적극 반영하고, 사용자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신뢰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한편, 사용자 간담회는 시스템의 주요 개선 사항과 보조금 업무 시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시스템 사용과 관련한 의견 등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서울, 부산, 대구 간담회에 이어 대전, 광주, 세종 등 나머지 권역에서도 진행될 예정이다.

FIS NEWS



한국재정정보원, 노동이사제 도입 및 노사 간담회 개최하여 노사 상생 경영에 박차

- 기관 최초 노동이사 선임 통해 노사 협력·소통 활성화 -

한국재정정보원은 기관 최초 노동이사제 도입 및 노동이사 선임에 따라, 노사 상생 간담회를 개최했다. 제4대 윤석호 원장은 취임(2025년 3월 12일) 이후, 노사 간 소통 강화와 근로자 경영 참여 확대를 통한 노사 상생 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노동이사제 도입을 신속하게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신임 노동이사는 근로자대표의 추천을 거쳐 기획재정부의 임명을 통해 초대 신숙현 노동이사가 선임되었다. 임기는 2025년 4월 21일부터 2027년 4월 20일까지 2년이다.

윤석호 원장은 “노동이사제 도입을 계기로 우리 원 직원들의 의견이 더욱 폭넓게 경영에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노동이사제는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 근로자대표의 추천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자를 비상임이사로 임명해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한국재정정보원은 2025년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노동이사제 도입 대상 기관이 되었으며, 이에 따라 작년 11월부터 관련 내규 정비와 내·외부 자문, 노사협의 등을 거쳐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며 노동이사제 도입을 추진해 왔다.



애독자 코너

독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월간 『나라재정』은
항상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찾아라~ 한국재정정보원 숨은 정보!



Quiz

국회를 통해 성립된 당초 예산에 대해 사후적으로 추가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정부가 새로 편성하여 국회의 심의·의결을 받는 예산은?

- ① dBrain+ ② 세계잉여금
- ③ 추가경정예산 ④ 본예산



우측 QR코드로
한국재정정보원 블로그에 접속해
정답을 찾아보세요



힌트



응모

좌측 QR코드로 접속해
정답을 응모해 주세요.
*응모기간 2025.6.26.~7.15.



» 지난호 정답 : 세계잉여금

» 지난호 퀴즈 당첨자 010-****-1424 010-****-1865 010-****-5089
 010-****-2201 010-****-7971

한국재정정보원 홈페이지와 블로그, 월간 『나라재정』에
숨겨진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를 찾아 애독자 퀴즈 정답을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산사태 국민행동요령

1. 일상 생활 중에

점검하고

집 근처 배수시설 등을
점검하고 위험요인 발견 시
시·군·구청 및 행정복지
센터에 신고하세요



2. 산사태 발생 우려 시

대비하고

산사태 정보시스템(PC),
'스마트산림재난' 앱(스마트폰)
또는 방송을 통해 산사태 예보
발령 정보를 확인하세요



3. 산사태 발생 시

대피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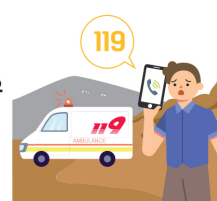
산사태 방향과 멀어지는
방향, 가장 안전한 높은
곳으로 대피하세요



4. 산사태 발생 후

신고하세요

매몰자나 부상자가 있을 경우
소방서(119)에 신고하세요



산사태 막을 수는 없지만 피할 수는 있습니다

산사태국민행동요령 관련 자세한 정보는
산사태정보시스템, 국민재난안전포털
또는 스마트폰 '스마트산림재난' 앱에서 확인하세요.

하나 더 1사1인, 통합 넘어 통일로

꿈을 찾는 탈북민 미래를 함께하는 회사

하나 더 1사1인 캠페인

남북하나재단은
탈북민 친화적인 고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대로 된 **일자리** '하나 더'
캠페인 **참여 기업** '하나 더'
재단 **임직원 노력** '하나 더'

탈북민의 꿈과 우리의 미래를 위한
하나 더 1사1인 캠페인에 함께해 주세요



남북하나재단
Korea Hana Foundation

